한반도 포커스
FOCUS ON KOREAN PENINSULA
2023-01

일본 안보 관련 정책 3 문서 개정 결정의 의미와 평가

박 영 준
조 진 구
박 성 빈
권 태 환
송 화 섭
미치시타 나루시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한반도포커스
2023-01



FOCUS ON KOREAN PENINSULA

일본 안보 관련 정책 3 문서 개정 결정의 의미와 평가

박 영 준
조 진 구
박 성 빈
권 태 환
송 화 섭
미치시타 나루시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한반도포커스 2023-01

일본 안보 관련 정책 3 문서 개정 결정의 의미와 평가

인 쇄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발 행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발행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주 소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전 화 02-3700-0700
팩 스 02-3700-0707

인쇄처 ㈜늘품플러스(070-7090-1177)

정 가 비매품
ISBN 978-89-8421-559-7 93300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한반도포커스 2023-01

일본 안보 관련 정책 3 문서 개정 결정의 의미와 평가

발 간 사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시작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은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3월 2일 긴급 소집된 유엔총회는 유엔헌장을 위반한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aggression)을 강력히 비난했으며, 즉각적인 무력 사용의 중지와 무조건 철군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이를 무시했고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지역을 강제로 병합한 뒤 러시아 영토로 편입했다. 전후 유지되어온 국제질서를 짓밟는 이러한 행동은 '법의 지배'가 아닌 '힘에 의한 지배'라는 강한 우려를 국제사회에 갖게 했다. 또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로 세계는 핵전쟁의 가능성을 현실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2022년 11월 13일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언급되었듯이, 이러한 침략이 세계 어디서든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안정적이고 안전할 수 없으며,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킬 것이다. 또한, 지난해 10월의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타이완 통일을 위해 무력 행사도 불사하겠다고 강한 의욕을 보이면서 국제사회는 타이완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한 데 이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이례적으로 6일 동안이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3일 동안 한 보고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는 '전술핵무기의 다량 생산'과 함께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최단기간 내에' '첫 군사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

했다.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면서 한국과 일본과의 '3각공조실현'을 추진하면서 '동맹 강화'를 구실로 '아시아판 나토' 같은 '새로운 군사 블록'을 형성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국제관계 구도 속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 투쟁원칙'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올해 한반도 정세는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도전에 대응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를 주도해가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고 표방했다.

지금 우리는 말 그대로 혼돈의 국제질서, 역사적 전환기 속에 살고 있다. 북한과 남북관계, 통일문제를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연구하고 담론을 주도해왔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2023년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면서 북한, 일본, 중국 및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관계의 담론 형성과 심층적인 연구를 주도하기 위해 한국의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나 주요 현안 발생 시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을 시리즈로 발간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 연구 성과를 담은 책자를 이번에 발간하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정부는 전후 일본 방위정책 혹은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정책문서 세 가지를 각의에서 결정했다. 이번에 출간하는 책자는 세 정책문서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논고들을 모은 것인데, 국내 최고의 일본 전문가와 함께 일본의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가 집필에 참여하여 일본 측 시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 책자가 일본의 새로운 안전보장정책과 방위 태세,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한미일 안전보장 협력 문제를 함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23년 1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이 관 세**

목 차

발간사 iv

총론: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대전환과 한반도 1

박 영 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의 의미와 내용 평가 15

조 진 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일본 국가안보 전략과 경제안보 37

박 성 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교수

'국가방위전략' 평가와 함의:
일본의 방위력과 방위장비이전 3원칙 49

권 태 환 전 주일국방무관

'방위력정비계획'의 주요내용 평가와 함의
- 자위대 체제, 방위력증강 7대 사업, 소요경비를 중심으로 65

송 화 섭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일본 전문가가 보는 일본 안보정책 변화와 한반도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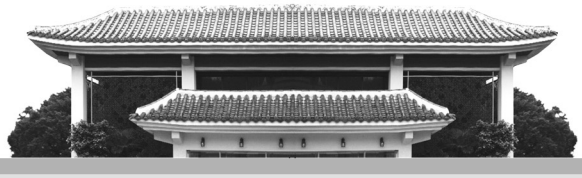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이사 겸 부총장, 교수

총론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대전환과 한반도

박 영 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Ⅰ. 문제의 제기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기시다 내각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가지 안보전략 관련 문서들을 공표하였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2013년 12월 당시 아베 내각이 공표한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한 것이고(이하 '국가안보전략서 2022'와 '국가안보전략서 2013'으로 각각 약칭), '국가방위전략서'는 2018년 12월에 역시 아베 내각이 공표한 '방위계획대강'을 이름을 바꿔 개정한 것이다. 또한 '방위력정비계획'도 2018년 12월에 공표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개칭 및 개정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공표 당일의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전략 관련 3문서의 개정으로 인해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큰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아사히 신문을 포함한 일본 언론도 보도기사에서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이라는 표제를 달았다. 그러나 새로운 안보전략서들에 대한 일본 내외의 반응에는 온도차가 나타났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새로운 전략서들에 나타난 내용 가운데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점했으나, 반격능력 보유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56%로 반대 의견 38%를 상회하는 반응이 나타났다.[1] 주변 국가들 가운데에서 북한 외무성은 일본이 타국 영역을 공격하기 위한 선제공격능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아시아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가하였다. 국내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 즉 반격능력 보유를 통해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으며, 일본이 한국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반격능력 행사를 단행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비판적 논평이 이어졌다.

---

1 『朝日新聞』이 2022년 12월 17일과 18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동 신문 2022년 12월 21일 기사 참조.

반면 미국은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국가안보보좌관의 논평을 통해, 일본의 전략서 개정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대담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필자를 포함한 국내 안보연구자들도 일본의 안보정책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과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며, 한일 간 안보협력 여하에 따라 한국의 안보역량 강화에 유용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2]

그렇다면 일본의 3가지 안보전략서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시다 총리 등이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이라고 설명하는 측면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이고,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이 한반도 및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일까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Ⅱ. 3가지 안보전략서들의 핵심 변화 내용

2022년에 개정된 3가지 안보전략서들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들과 마찬가지로 위상 및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 가장 상위차원의 문서가 '국가안보전략서 2022'로서 전체적인 일본의 외교 및 방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국가방위전략서'는 방위차원의 정책방향과 군사력의 증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방위력정비계획'은 육해공 자위대가 갖추어야 할 전력증강의 규모와 소요 예산을 다루고 있다. 이 3가지 전략문서들을 이전에 공표되었던 문서들과 비교하여 "대전환"의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보아 안보환경 평가와 위협인식, 안

2 박영준, "일본 안보전략서 독해법", 『국민일보』 2022년 12월 27일 참조. 권태환 장군(전 일본 국방무관) 인터뷰도 참조. 『중앙일보』, 2022년 12월 24일.

보 및 방위전략의 기본적 어프로치, 전력증강의 방향, 안보정책의 물적 및 제도적 기반 재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안보환경 평가와 위협인식

어떤 국가의 안보전략서들도 서두에는 해당 국가를 둘러싼 안보환경을 분석하고, 국가안보위협요인을 도출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국가안보전략서 2022'와 '국가방위전략서' 등의 서두에 서술되는 안보환경 평가는 전체적으로 수미일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국가안보전략서 2022'는 일본이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환경에 직면"하고 있다고 서술하면서, 글로벌 안보환경 측면에서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해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고, 국제질서의 근간이 동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国家安全保障戦略」, 2022: 3, 7).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을 특히 지적하면서, 중국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면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고, 타이완에 대해 무력행사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러한 중국의 군사동향은 "일본과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사항이고,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북한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및 변칙궤도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이동식 차량(TEL)이나 잠수함, 철도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를 발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군사동향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물론 '국가안보전략서 2013'이나 '방위계획대강 2018'에서도 중국과 북한의 군사동향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기울여지면서, 중국의 군사동향이 "일본과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이 되고 있고, 북한의 군사동향이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면서 절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의 '국가안보전략서 2022'와 '국가방위전략서'는 특히 중국에 대해 "최대의 전략적 도

전"이라는 표현을 선택하면서, 보다 강화된 위협인식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국가방위전략서'는 이같은 위협인식을 토대로 종전에 상정되어 왔던 "항공침공, 해상침공, 착상륙침공"과 같은 전통적 전쟁수행방법에 더해, "정밀타격능력이 향상된 탄도 및 순항미사일에 의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 "위기(僞旗) 작전을 비롯한 정보전 등의 하이브리드 전쟁,"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의 영역과 무인자산을 활용한 비대칭적 공격," "핵보유국들의 핵무기에 의한 위협" 등이 "새로운 전쟁방식"으로 현재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国家防衛戦略」, 2022: 5). 일본의 안보전략서에서 자신들이 직면할 수 있는 미래전쟁 가능성에 대해 미사일 공격, 하이브리드 전쟁, 다영역에서의 비대칭 공격, 핵위협 양상까지 포함해서 서술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된다. 그만큼 일본의 안보위협인식이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가 아닐까 한다.

2. 안보정책 기조와 전략적 어프로치

일본은 '국가안보전략서 2013'을 포함한 기존 안보전략서들에서 일본 안보정책의 기준 개념으로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선언하였고, 전후 안보정책의 기조에 따라 '평화국가로서 전수방위의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이며,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을 것'이며, '비핵 3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표명해 왔다. 이같은 기본 원칙들은 '국가안보전략서 2022'와 '국가방위전략서'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이같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어프로치'로서 3가지 방침, 즉 ① 일본 자신의 방어체제 및 방위력을 강화하고, ② 미일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③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동지국(同志國, like-minded countries) 들과의 제휴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들이 새로운 안보전략서들에서도 견지되고 있다.

안보정책 기조와 전략적 어프로치의 전체적인 틀은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지

만, 다만 세부적인 내용들에 관해서는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① 일본 자신의 방어체제 및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는 후술하듯이 큰 변화가 보여지고 있다. ② 미일동맹 강화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기존 전략서들에서 표명된 미사일 방어 및 확장억제 강화 등의 안보협력 방향이 재강조되고 있지만, 특히 2022년 10월에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서들과의 정합성 견지가 강조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국가방위전략서'는 미국의 최근 안보전략문서들과의 조율 속에서 미일 간 방위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새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3]

③ 동지국(同志國, like-minded countries)과의 제휴 강화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전략서 2022'와 '국가방위전략서' 등은 쿼드에 속한 호주 및 인도와의 안보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 유럽, 동남아 국가들, 캐나다 및 뉴질랜드 등과의 안보협력 강화 등을 향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방위계획대강 2018'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우리로서는 주목된다. '방위계획대강 2018'에서는 주변국과의 안보협력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호주, 인도, 동남아 국가, 한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의 순으로 서술한 바 있다(『平成31年度以後に関る防衛計劃の大綱』, 2018). 그에 비해 '국가안보전략서 2022'는 호주, 인도, 한국, 유럽, 동남아 국가들의 순으로 배치하면서, 한국이 일본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이며, 향후 한일 간, 혹은 한미일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4] 이 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 간 및 한미일 간 안보협력 복

3 國家安全保障會議 및 閣議 결정,「国家防衛戰略」(2022. 12. 16.), p. 1. 이와 관련하여 일본이 '방위계획대강 2018'에서 표명한 '다차원 통합방위력' 개념이 당시 미국이 추진하고 있던 '다영역 작전' 개념과 조율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4 國家安全保障會議 및 閣議 ,「国家安全保障戰略」(2022. 12. 16.). 다만 '국가방위전략서'는 동지국과의 제휴 강화를 설명하면서, 호주, 인도, 영국 및 프랑스, 한국 등의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과의 안보협력방향에 대한 설명은 '국가안보전략서 2022'와 유사하다.

원의 정책방향이 추진되는 점을 고려한 일본 측의 조정이라고 생각된다. '국가방위전략서'는 이러한 동지국들과 다층적 방위협력을 추진할 것이고, 원활화협정(RAA),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방위장비품 및 기술이전 협정 등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여, 주변 우방국들과 보다 적극적인 방위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国家防衛戦略」, 2022: 15).

3. 전력증강 방향: '반격능력'의 표명

앞에서 언급된 3가지 전략적 어프로치 가운데 ① 일본 자신의 방어체제 및 방위력 강화와 관련하여, 역대 전략문서들은 자위대의 전력증강 기준이 되는 개념들을 제시해 온 바가 있다. 특히 '방위계획대강 2018'은 기존 육해공 전력 외에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의 영역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통합운용하는 다차원 통합방위력"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공표된 '국가방위전략서'도 잠재적 위협국가의 능력 및 새로운 전쟁수행방식을 고려하여 이같은 "다차원 통합방위력"의 기준 개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에 더해 '국가안보전략서 2022' 및 '국가방위전략서'는 그간 자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온 "반격능력"개념, 즉 상대국가에 의해 탄도미사일 공격이 가해졌을 때, 무력행사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상대국가 영역에 대해 일본이 유효하게 반격을 가하는 능력의 보유를 명문화하였다. '국가방위전략서'는 일본 주변 국가들의 변칙궤도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 능력이 증대되면서, 일본에 대한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상대국에게 반격을 가하는 반격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일본에 대한 침공을 억제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国家防衛戦略」, 2022: 9).

이같은 "반격능력" 및 "다차원 통합방위력"을 구현하기 위해 '방위력정비계획'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자위대가 갖춰야 할 세부 능력으로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통합방공미사일 방어능력," "무인자산 방어능력," "영역횡단

작전능력," "지휘통제 및 정보능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5]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이란 일본에 침공해 오는 함정이나 상륙부대에 대해 위협권 외곽에서 저지하는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2027년도까지 지대함 및 함대함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하며, 향후 10년 후의 시점에는 공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고속활공탄 등의 운용 능력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였다.[6] 이러한 전력들이 소위 "반격능력"의 핵심적인 구현 수단이 될 것이다.

"통합방공미사일 방어능력"과 관련하여 이미 일본은 해상배치형 SM-3 요격미사일과 지상배치 PAC-3 요격미사일 체제를 구비하고 있다. 그에 더해 '방위력정비계획'은 2027년까지 경계관제 레이더, 지대공 유도탄, 이지스 시스템 탑재한 호위함 등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10년 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소형 무인기 등에 대한 요격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 전략서는 AI와 유인 장비를 조합하는 무인자산의 활용이 미래의 부대구조와 전투방법을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2027년까지 무인잠수정 등 무인무기 체계를 갖추고, 10년 후에는 무인자산을 활용한 전투방법을 구체화하여, 정보수집 및 경계감시 뿐만 아니라, 전투지원 등의 임무에 무인무기체계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동 문서는 또한 "영역횡단작전능력"과 관련하여 우주영역에서는 위성 50여기를 저궤도에 배치하는 위성 컨스텔레이션 시스템을 갖추어 정보수집 및 통신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이버 영역에서는 외부 인재 등의 영입을 통해

---

5 '방위계획대강 2018'에서도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통합미사일 방공능력, 기동전개 능력 등이 제시된 바 있으나, '국가방위전략서 2022'가 보다 세부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6 이 과정에서 기존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가 200km에서 1000km로 늘어나게 되고, 사정거리 1,250km의 토마호크 미사일도 도입될 예정이다. 2017년 일본이 도입하기로 결정한 노르웨이제 JSM(사정거리 500킬로미터)과 미국제 JASSM-ER(사정거리 900킬로미터) 공대지 순항미사일도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의 핵심전력이 될 전망이다.

전문요원을 대폭 증강하고, 정부내 사이버 안보체제를 보강하여 10년 후에는 사이버 방어태세를 일층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휘통제 및 정보능력"과 관련하여 '방위력정비계획'은 하이브리드 전쟁 및 정보전쟁에 대처 가능한 정보 능력을 갖추고, 정보수집위성을 통해 획득된 정보를 자위대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특히 AI를 포함한 각종 수단을 활용하여 정보수집 및 분석 등의 임무에 대응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4. 안보/방위정책 물적, 제도적 기반 강화

'국가안보전략서 2022' 및 '국가방위전략서,' 그리고 '방위력정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표명된 "반격능력"을 핵심축으로 한 "다차원 통합방위력"을 향후 5년과 10년 내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선 국방예산의 증액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지휘체제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방위력정비계획'은 제시된 전력증강 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2027년까지의 향후 5년간, 총액 43조엔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산정하였다. 이 경우 현재 5조엔 규모의 방위비는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액되어, 2027년도에는 총액 8.9조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朝日新聞」 2022. 12. 15.). '방위력정비계획'은 증대되는 방위비의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세출개혁, 결산잉여금 활용, 세외 수입 활용한 방위력 강화자금 창설 등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미 일본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 소득세, 담배세 등의 증세, 국채발행, 기존 세출의 재조정 등을 통해 방위비 증액을 이루고, 이를 통해 '반격능력'과 '다차원 통합방위력'의 확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차원 통합방위력'을 실제 작전에 운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통합막료감부 및 통합막료의장 체제로는 한계가 따른다고 일본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방위력정비계획'은 상설 통합사령부를 창설하여 통합운용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경우 신설되는 자위대의 통합사령부가 육해공 자위대의 총대사령부와 자위함대 등 작전부대를 지휘하고, 기존의 통합

막료의장은 총리 및 방위상에 대한 군정상의 자문과 군사외교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의 재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치 미국의 합참의장이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에 대한 군사상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인태사령부 등 각 지역의 통합사령부가 군사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체제와 비견될 수 있는 지휘구조로 자위대가 재편되는 것이다. 아울러 '방위력정비계획'은 기존의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영역횡단작전의 중요한 요소로 우주 영역이 부각됨에 따라 항공자위대에 관련 임무를 중점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Ⅲ. 일본 안보정책의 전환과 한반도에의 영향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 안보전략 3개 문서의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이라고 부를만 하다. 첫째,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동향,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적시하며,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보는 안보인식이다. 둘째, 이에 대응하여 일본이 대외적으로 미일동맹 강화는 물론, 2017년 이후 형성하기 시작한 쿼드의 멤버 국가,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의 나토 소속 국가들을 포함한 소다자 안보협력체와의 협력을 자신들 안보정책의 중요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그동안 자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오던 소위 "반격능력" 보유를 명문화하였다는 점이다. 즉 상대국가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응하여 일본도 그동안 금기시되어온 중거리 미사일 전력들을 자체 개발하거나 해외로부터 도입하여, 제2가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그 외 무인무기체계 개발 및 우주의 군사화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되고 있다. 넷째, 새로운 전력증강과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를 나토 기준의 GDP 대비 2% 수준

으로 올리고, 기존 통합막료회의 외에 통합사령부를 창설하여 육해공 자위대의 작전지휘를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와 "반격능력" 명문화 등 방위능력의 강화가 종전 평화헌법 하에서 안보정책을 제약해온 비군사화의 기조를 완연하게 벗어나는 의미를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반격능력을 갖게 될 경우, 북한과 중국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반격능력 행사가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다만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는 한일관계 측면에서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적인 안보질서의 변화 맥락 속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17년 시진핑 주석의 공언처럼, 2049년까지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일류의 군대를 건설하겠다는 "강군몽"의 전략에 따라 해·공군 전력 및 핵전력을 강화하고, 타이완에 대해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에 공표한 "핵무력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그동안 증강된 핵전력을 선제공격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NPT 체제 하에서 인정된 핵보유국이라 할지라도, 국지전에서 핵전력을 공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같은 국제안보정세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미국도 지난해 2월에 공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서, 그리고 10월에 공표한 국가안보전략서와 국방전략서, 그리고 핵태세 보고서 등을 통해 "통합억제"의 전략 개념 하에 국내적으로 미국의 국가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일층 강화하겠다는 안보정책 기조를 보인 바 있다. 일본의 3가지 안보전략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안보정책의 전환적 측면들은, 동맹국 미국의 글로벌 안보정책 추진 방향과 조율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 안보정책의 전환적 측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사실 반격능력 강화를 포함한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는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력을 억제하고, 중국의 잠재적 공세를 견제하는 전

략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같은 점은 한국의 안보정책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일본이 한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존립위기사태"를 선포하고 "반격능력"을 구사한다면, 의도치 않게 한반도가 전장화되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다. 이같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 혹은 한미일 간 전략협의를 활발하게 가동하여, 일본의 안보정책이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조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을 과대해석하여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변화라고 맹목적으로 비판을 가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정책을 위해서나 한미동맹의 신뢰 증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대응이 아니다.

참고문헌

권태환, “일본의 군사전략과 우리의 대응”, 『군사논단』 제100호 (한국군사학회, 2020)
김태효, 박중현, “일본은 보통국가인가?: 군사력 수준과 무력행사 범위의 고찰,” 『국제관계연구』, 제25권 2호(2020년 겨울호).
박영준, “일본 안보전략서 독해법”, 『국민일보』 2022년 12월 27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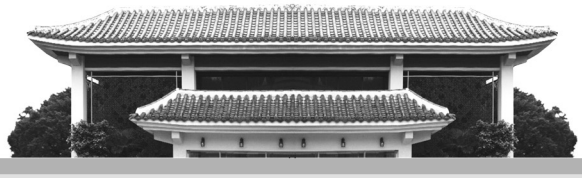
Armitage, Richard L.and Joseph S. Nye, *The U.S.-Japan Alliance in 2020: An Equal Alliance with a Global Agenda*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20.12)
Green, Michael J., *Line of Advantage: Japan's Grand Strategy in the Era of Abe Shinzo* (Columbia University Press, 2022)
Michishita, Narushige, “Future of Japan's Defense Policy and the Korean Peninsula”, KNDU Defense Policy Conference (2021.11.1.)
Satake, Tomohiko,“The Rise of Minilateralism in Indo-Pacific: QUAD and AUKUS”,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 논문 (2022. 12. 3.)
Smith, Sheila A.,*Japan Rearmed: The Politics of Military Pow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國家安全保障會議 및 閣議,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2013. 12. 17.)
國家安全保障會議 및 閣議, 『平成31年度以後に関る防衛計劃の大綱』(2018. 12. 18.).
國家安全保障會議 및 閣議, 「国家安全保障戦略」(2022. 12. 16.).
國家安全保障會議 및 議, 「国家防衛戦略」(2022. 12. 16.).
國家安全保障會議 및 閣議, 「防衛力整備計劃」 (2022. 12. 16.).
「国力としての防衛力を総合的に考える有識者会議」報告書 (2022. 11. 22.).
佐佐江賢一郎,「反撃能力を導入し核戦力共有の議論を」, 『中央公論』, 2022. 7.
防衛省,『防衛白書:2020』(東京: 防衛省, 2020).
兼原信克, 『安全保障戦略』(日本經濟新聞出版, 2021).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의 의미와 내용 평가

조 진 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Ⅰ. 서론: 방위력 강화를 향한 일본의 정책문서 결정 과정

2022년 12월 16일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세 가지 중요 정책문서를 각의결정했다. 국가안보에 관한 '최상위 정책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은 2013년 12월 17일 첫 제정 이후 9년 만에 개정되었으며, 방위 목표와 달성 방법과 수단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국가방위전략'과 자위대의 체제와 5년간의 방위비 총액과 주요 장비의 수량을 표시한 '방위력정비계획'은 4년 만에 개정했다. 뒤의 두 문서는 미국의 전략문서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방위계획의 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대체하는 것으로 2022년 4월 26일자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의 정책 제언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쪽 분량의 자민당의 정책 제언 보고서는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가속도적으로 엄중함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 특히 중국, 북한, 러시아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의 군사 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복합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본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고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민당의 정책 제언 보고서는 미사일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진화로 요격만으로 방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일본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무력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counterstrike capabilities)'의 보유를 통해 자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1]

일본의 방위력 강화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021년 9월 말에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서면서 제시한 공약이며, 총리 취임 이후 치러진 두 번의 국정 선거(2021년 10월 31일 중의원 선거와 2022년 7월 10일 참의원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2021년 8일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 2013년 6월과 2017년 3월의 정책 제언에서 자민당은 '책원지(策源地) 공격 능력'과 '적기지 반격 능력'의 보유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의 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의 정책문서 개정 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 12월 6일 국회소신표명연설에서는 "소위 적기지 공격 능력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해 속도감을 가지고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해 가고" 이를 위해 '대략 1년을 두고' 새로운 정책문서를 책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 내에서 본격적인 검토작업이 시작되었으며,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국가안전보장국과 외무성, 방위성을 중심으로 17회에 걸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9월 30일부터 4회에 걸친 총리 자문기구('국력으로서의 방위력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유식자(전문가)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참고하여 이번 정책문서를 결정했지만,[2] 자민당 내의 보수강경파인 '국방족' 의원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2012년 12월부터 2014년 9월,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아베 정권에서 두 번 방위상을 역임한 오노데라 이쓰노리 의원(전 방위상)은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 회장으로서 앞의 정책 제언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언론 인터뷰와 방송 출연을 통해 반격 능력 보유와 GDP 대비 2%로의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자민당과 공명당의 실무자 정책 협의에서도 조정자 역할을 했다.

각의 후의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언급했듯이 이번 정책문서 결정은 일본 '안보 정책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정책 대전환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의 외교·안보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의 주요 내용과 특징, 그리고 그 의미를 2013년의 전략문서와 비교해보면서 검토하고자 한다(이하 편의상 2013년 국가안전보장전략을 舊 전략,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을 新 전략이라 한다).

---

2 총리 자문기구의 회의는 9월 30일, 10월 20일, 11월 9일 및 21일 등 네 번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 작성된 보고서가 11월 22일 기시다 총리에게 제출되었다.

Ⅱ.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구성과 주요 내용: 舊 전략과의 비교

2013년 처음 만들어진 舊 전략이 4개 장으로 구성되었던 것과 달리 新 전략은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자료: 新舊 국가안전보장전략의 목차 비교" 참조). 전략의 책정 취지를 설명하는 1장에서 舊 전략은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한층 엄중함이 더해지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표명하고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기본이념을 제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익과 국가안전보장의 목표와 과제, 나아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외교와 방위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가안전보장의 기본방침이라고 규정하면서 해양, 우주, 사이버, ODA(공적개발원조), 에너지 등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 정책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자리매김했다.

반면, 新 전략은 파워 밸런스의 역사적 변화와 지정학적 경쟁의 격화로 인해 기존 국제질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일본은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전보장 환경의 한가운데 있다"고 위기의식을 강하게 표출했다. 또한, 최악의 사태에도 대비하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국에 바람직한 안전보장 환경을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강력한 외교를 전개해야 하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위력의 보유야말로 이러한 외교 기반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新 전략은 국가안전보장의 대상이 경제와 기술 등 비군사적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군사와 비군사 분야의 경계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국가안보에 관한 '최상위 정책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이 외교, 방위, 경제안전보장, 기술, 사이버, 해양, 우주, 정보, ODA, 에너지 등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 정책에 '전략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문화했다.

또한, 舊 전략은 2장에서 일본의 국익과 국가안전보장의 목표를 제시했던 것과 달리 新 전략에서는 2장에서 국익을 5장에서 국가안전보장의 목표를 담았다. ①주권과 독립 유지, 영토 보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 확보, ②경제성장을 통한 번영과 이를 위한 국제환경 실현, ③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에 입각한 국제질서의 유지와 옹호를 일본의 국익이라고 규정한 점에서는 이전과 다름이 없었지만, ③의 끝부분에 아베 정권 이후 일본 외교 전략의 핵심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의 유지·발전을 추가하였다.

新 전략은 3장에서 舊 전략에서 국가안전보장의 기본이념으로 제시했던 국제협조를 중시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유지를 비롯하여 보편적 가치를 유지·옹호하는 형태의 안전보장 정책 수행, 평화국가로서 전수방위, 비군사대국 지향, 비핵 3원칙 견지 등의 기본방침 유지, 안전보장정책의 기축으로서의 미일동맹, 타국과의 공존공영과 동지국과의 연계 및 다국간 협력 중시 등 다섯 가지를 국가안전보장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이것은 舊 전략에는 없었던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新 전략은 5장에서 국가안전보장의 목표를 제시했다. 舊 전략이 ①일본의 안전과 존립에 필요한 억제력의 강화를 통한 위협의 방지와 배제, 피해의 최소화, ②미일동맹 강화, 역내외 파트너와의 신뢰·협력관계 강화, 안전보장협력을 통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환경의 개선과 위협의 예방과 삭감, ③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강화, 분쟁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 글로벌한 안전보장환경의 개선을 통한 평화롭고 안정되고 번영하는 국제사회 구축 등 세 가지를 목표로 삼았던 것을 그동안의 정세변화를 반영하여 네 가지 형태로 목표를 확장하고 구체화했다.

舊 전략에서 24번이나 사용되었던 '아시아태평양'이란 용어는 新 전략에서는 '인도-태평양'으로 대체되었는데,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로서 일본이 동맹국·동지국과 연계하여 국제관계에서의 새로운 균형을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실현하는 것을 목표의 하나로 꼽았다. 특히, 국가의 독립과 생존 및 번영을 경제면에서 뒷받침한다는 의미에

서 일본경제의 자율성, 우위성 및 불가결성 확보라는 경제안전보장 관련 항목(6장 2절의 (5))을 新 전략의 목표에 추가했다.

한편, 舊 전략 3장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추출한 국가안전보장상의 과제를 다루었었는데, 新 전략에서는 4장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의 분석과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환경과 과제를 분석한 2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또한, 전략문서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안전보장 목표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舊 전략은 4장에서, 新 전략에서는 6장과 7장에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6장에서는 외교력, 방위력, 경제력, 기술력 및 정보력 등 종합적인 국력을 유기적이며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국가안전보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어프로치로서 ①국제환경을 능동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외교, ②일본 방위체제의 강화, ③미국과의 안전보장 협력 심화, ④군사와 비군사, 유사시와 평시, 사이버와 해양 및 우주공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횡단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안전보장을 국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재정 기반, 사회적 기반 및 지적 기반의 강화 방안이 7장에 언급되어있다.

또한, 대략 10년을 염두에 두면서 전략문서가 작성되었으나 안전보장환경 등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수정을 한다는 것이 8장에, 마지막 9장에는 역사의 전환기에 일본의 국제적 존재감과 신뢰를 높이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면서 일본이 국제질서 강화를 주도해가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어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新 전략은 자유나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이나 법의 지배 같은 보편적인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는 국가들이 기존 국제질서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익 즉 국가안전보장의 목표와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수방위나 비핵 3원칙, 다른 나라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겠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는 하지만, 新 전

략에 입각한 전략적 지침과 시책은 "전후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을 실천 면에서 크게 전환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Ⅲ. 新 전략에 나타난 위협 인식과 일본의 방위력

앞에서 언급한 대로 2013년 12월 舊 전략을 결정했을 당시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한층 엄중함이 더해지고 있다"는 인식은 9년 사이에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전보장환경"이란 표현으로 심각함의 정도가 바뀌었다. 그 뒤에는 무력행사의 일반적 금지라는 국제사회의 대원칙을 짓밟는 러시아,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양에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중국,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 등의 현실적 위협에 대한 위기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중국, 북한 및 러시아에 대한 위협 인식

舊 전략에서는 중국보다 북한을 먼저 기술하면서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이나 핵무기 소형화 및 탄도미사일에의 탑재 시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을 질적으로 심각"하게 만들었으며 불확산의 관점에서도 "국제사회 전체의 심각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이란 핵 문제와 함께 거론하면서 "단순히 각각의 지역 문제라고 하기보다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었다.[3] 중국에 대해서 舊 전략은 국방비의 지속적인 증액과 군사력

3 반면 같은 날(2013년 12월 17일) 개정된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은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고 언급했는데, 이후 발간된 방위백서는 이 표현을 답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

의 광범위하고 급속한 강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공역(海空域)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와 활동의 급속한 확대 등 구체적인 행동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대외자세, 군사 동향 등은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 되고 있어" "신중하게 주시해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新 전략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동맹국·동지국 등과 연계하여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실현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변국의 동향 기술 순서를 북한, 중국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의 순으로 바꿨으며, 舊 전략에서 위협이나 우려 사항이 아니라 안전보장상의 파트너로 인식했던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을 강하게 표출했다.

우선 중국은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목표로 국방비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핵과 미사일 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증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공역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의 시도를 강화"하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면서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新 전략은 중국을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이번에 추가) 우려 사항이라면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며 일본의 "종합적 국력과 동맹국·동지국 등과 연계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일본이 책임 있는 국가로서 "다양한 차원의 의사소통을 통해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공통의 과제에 대해 협력해가는 '건설적이며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도 동시에 언급했으나 舊 전략에서 "'전략적 호혜 관

기·미사일 개발은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계'를 구축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타이완 통일 문제에 대해 舊 전략은 아무런 언급 없이 "양안의 군사 밸런스는 변화하고 있고 양안 관계에는 안정화의 움직임과 잠재적인 불안정성이 병존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반면, 新 전략은 평화적 통일 방침은 견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타이완 통일을 위한 "무력 행사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인도-태평양지역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려가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출했다.[4]

북한에 대해서는 핵전력을 질적·양적으로 최대한의 속도로 강화한다는 것이 북한의 방침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관련 기술과 운용 능력의 급속한 발전을 함께 고려하면 북한의 군사 동향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an even more grave and imminent threat)'이라고 표현을 강화했다. 다만, "일조(북일)평양선언에 입각해 납치·핵·미사일 같은 제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의 해결 없이 북일 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은 견지되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 이후 기시다 총리는 가장 강력한 말로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국제사회의 결속과 연대를 강조해왔는데, 이것은 新 전략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났다. 新 전략은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략'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태이며, 인도-태평양지역 특히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했다. 특히, 新 전략은 러일 간 영토분쟁 대상인 북방영토에서 군비를 강화하고 일본 주변에서 함정과 폭격기를 동원해 중국과 공동 훈련을 하는 등 군사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외적 활동과 군사 동향이 유럽에서 '안전보장상의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하면서도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4 新 전략에서 타이완을 "민주주의를 포함한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고 긴밀한 경제 관계와 인적 왕래를 하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했던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는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려'라고 표현하는 데 그쳤다. 러시아를 '위협'으로 규정했을 경우 예상되는 러시아의 반발, 북방영토 문제나 러시아에 대한 높은 에너지 의존율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2022년 4월 자민당의 정책 제언 보고서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의 '중대한 위협'과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각각 규정했다. 자민당의 정책 제언서가 중국에 '위협'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었으며, 중국, 북한, 러시아를 함께 '위협'이라고 표현한 것도 처음이었다. 결과적으로 新 전략은 북한만을 안전보장상의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각의결정을 거쳐 2006년 1월 31일 중의원 의장에게 보낸 일본 정부 답변서는 위협에 대해서 "침략할 수 있는 '능력'과 침략하고자 하는 '의도'가 결부되어 현재화(顯在化)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중국군의 규모는 세계 최대이며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구식 장비도 많고 "중국이 일본 침략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중국을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다. 냉전 시대 일본은 소련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했었는데, '위협'과 '잠재적 위협'의 차이에 대해서도 "침략할 수 있는 군사능력에 착목(着目)해 그때그때의 국제정세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용해 왔다"고 답변했다(참고문헌의 질문주의서와 답변서).

2006년 10월 이후 6번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다양한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을 일본이 안전보장상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동향에 대한 일본의 평가에 비춰볼 때 균형 있는 평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발본적인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미일동맹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전보장환경'에 직면해 안전보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국력의 요소로 新 전략은 외교력을 비롯한 5개를 제시했지만,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방위력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략과 같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5년 뒤인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겠다고 명문화했다.

특히, 新 전략은 2027년까지 동맹국인 미국 등의 지원을 받지만, 일본에 대한 침공에 대해 일본의 일차적 책임하에 대처하고 약 10년 뒤까지 "보다 조기에 원거리에서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침공을 저지·배제할 수 있도록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주·사이버·전자파 등의 영역 및 육해공 영역에서의 능력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영역횡단작전능력', 위협권 밖에서 대처하는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능동적 사이버 방어'와 이를 위한 정보수집·분석 능력, 공격용 무인기 등을 활용한 '무인 자산(asset) 방위능력' 강화 등이 열거되었다.

新 전략은 일본에 대한 침공을 억제하는데 '열쇠'가 되는 것이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을 활용한 '반격 능력'이라고 명기했다. 극초음속무기 등 미사일 관련 기술과 포화공격 등 실전적 미사일 운용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기존의 미사일 방위망만으로는 '완전히' 대처하기 어렵다면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이뤄졌을 경우…필요 최소한도의 자위조치로서 상대 영역에서 유효한 반격을 가능하게 하는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을 반격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新 전략은 반격 능력 보유를 통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그 자체를 억제하고 상대의 추가적인 무력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타이밍이 문제다. 新 전략은 헌법과 국제법, 전수방위원칙과 무력 행

사 3 요건 등에 입각해 반격 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무력 행사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먼저 공격하는 선제공격"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선제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2년 12월 20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타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력 공격에 착수했을 때가 무력 공격이 발생한 때인 이상 현실적으로 피해받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나라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朝日新聞, 2022/12/21).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미사일이 일본을 향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단을 잘못하면 국제법에서 금지하는 선제공격이 될 우려도 있다.

또한, 新 전략은 반격 능력 보유 목표 시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경우 개량작업은 2026년 이후에야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이 도서(島嶼) 방위용으로 개발 중인 사정거리 2,000-3,000km의 고속활공탄이나 극초음속 유도탄도 2030년대에나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적 조치로서 일본은 미국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도입할 계획인데,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시기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반격 능력 행사는 미국과의 협력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新 전략은 반격 능력 보유에 수반하여 "탄도미사일 등의 대처와 마찬가지로 일·미가 협력해서 대처해갈 것"이며, "미일의 역할·임무·능력에 관한 부단한 검토를 바탕으로…영역횡단작전이나 우리나라(일본)의 반격 능력 행사를 포함한 일미(미일) 간의 운용 조정, 상호운용성의 향상…일미의 시설 공동사용 증가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5월과 11월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해 미일동맹의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으며, 일본의 전략문서 각의결정 후 오스틴 국방장관과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 1월 13일 워싱턴에서 열릴 미일 정상회

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제기할 것이며, 미일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양국 외교·국방 각료에게 실무작업의 착수를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책정한 이후 일본은 2014년 4월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결정함과 동시에 이에 입각한 운용지침을 결정했다. 동년 7월에는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결정을 한 데 이어 2015년 4월에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5년 9월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정비했다.[5] 이때 발표된 새로운 무력 행사 3 요건은 ①일본 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②이를 배제하고 일본의 존립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으며, ③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3 요건에 따라 반격 능력을 행사하지만,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 이외에 소위 '존립위기사태'에서도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반격능력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021년 7월 5일 아소 다로 부총리(당시)는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사태'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미일 양국이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합의하면 미중 갈등과 중국-타이완 갈등의 정도를 반영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면서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다. 물론 개정 가이드라인에 '존립위기사태' 시에도 반격 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자위대가 방어 임무를 맡고 공격은 미군에 의존해왔던 미일 양국의 역할 분담에 큰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미일동맹은 또 한 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며, 평화 국가를 자처해온 일본의 전수방위

5 안전보장 관련 법안이란 자위대법, 주변사태안전확보법, 선박검사활동법 등 기존 10개 법안을 일괄 개정하는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과 함께 외국 군대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안'을 말한다.

원칙은 형해화(形骸化)하고 자국의 안전보장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강화가 안전 증대는커녕 역내 군비경쟁의 도화선이 될 우려도 있다.

안전보장 관련 법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주요 사태와 자위대의 대응[6]

상정 사태		자위대의 대응
중요영향 사태	방치하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	외국군에 대한 후방지원, 선박 검사, 수색활동
존립위기 사태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을 위협받아 국민의 생명, 자유 등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는 사태,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고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 등을 조건으로 총리가 방위출동 명령	집단적자위권에 입각한 무력 행사 (미군 등에 대한 공격에 반격)
무력공격 사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발생하거나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임박한 사태	개별적자위권에 입각한 무력 행사

Ⅳ. 新 전략과 한국의 안전보장

2022년 7월 22일 확정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한일 및 한미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성화해 3국 간 안보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또한, 10월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6 중요영향사태안전확보법(정식명칭은 "중요영향사태에서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重要影響事態に際して我が国の平和及び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に関する法律)")과 사태대처법(정식명칭은 "무력공격사태 및 존립위기사태에서의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와 국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武力攻撃事態等及び存立危機事態における我が国の平和と独立並びに国及び国民の安全の確保に関する法律)")에서 상정하고 있는 자위대의 대응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으며, 11월 13일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지금의 한반도와 역내외 정세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확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법의 지배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은 필요하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일본은 한국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안전보장 면을 포함해 "일한(한일)· 일미한(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가겠다"고 했다. 또한, 동맹국·동지국 간의 네트워크를 중층적으로 구축하고 확대함으로써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미한, 일미호(호주) 등을 틀을 활용하면서 호주, 인도, 한국, 유럽제국, 아세안 제국, 캐나다, NATO, 유럽연합 등과의 안전보장상의 협력을 강화"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자 및 다자간 대화를 통해 동지국 등의 인도-태평양에의 관여 강화 촉진, 공동 훈련, 정보보호협정과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ACSA, 상호군수지원협정), 원활화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 RAA),[7] 방위장비품의 공동개발과 이전(移轉), 능력구축지원,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유연한 억제조치(Flexible Deterrent Option, FDO)[8]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된 국방 당국 간의 교류가 재개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미국과 호주, 일본은 미국을 비롯해 호주, 프랑스, 영국, 인도네시아, 인도, 독일, 필리핀 등과도 외교·국방 각료급의 2+2를 개최하고 있지만, 경제와 국방에서 세계 10위 이내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런 채널조차 없다. 2022년 6월 10일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는 세계가 직면한

7 자위대와 상대국 군의 방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정.

8 위기 발생 시 상대로부터의 무력 공격을 억제하고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과 함께 외교, 경제 등 모든 수단을 동시에 취하는 것.

도전과 위기에 대해 일본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평화를 위한 기시다 비전'을 제시하면서 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제창했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업데이트한 '평화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플랜'을 올해 봄까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이 어디까지 안보협력을 추진할지에 따라 한일 및 한미일 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 일본이 추진하려는 방위력 증강은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고 일본의 대미 자주성을 높여줄 것이지만, 중국, 북한 및 러시아를 자극하고 3국 간의 군사적 협력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

지금 세계는 新 전략이 지적하는 '역사의 전환기'에 있다. 과거의 낡은 틀에서 깨어나 일본과 세계를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우리 국익을 지키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12월 말 한국 정부가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함을 재확인"한다는 표현의 함의는 크다(대한민국정부, 2022: 23). 앞으로 상당 기간 미중 및 중일 간의 경쟁과 대립이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타이완 해협 문제가 한반도 문제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은 한국 외교에서 처음 등장한 것인데, 향후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힐지, 아니면 선택지를 좁힐지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를 네트워크화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는데, 역사문제로 주기적으로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동맹국인 미국에 이어 각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2021년 9월 13일 제5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공동성명)와 매우 중요한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2022년 10월 22일 일본-호주 안전보장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관계로 중시하는 호주 정도로 양국관계를 재설정하고 협력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부. 2022,『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서울: 대한민국정부.

自由民主党. 2022,“新たな国家安全保障戦略等の策定に向けて提言 ~より深刻化する国際情勢下におけるわが国及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防衛力の抜本的強化の実現に向けて~.”
https://storage.jimin.jp/pdf/news/policy/203401_1.pdf.(검색일: 2023. 1. 5.)

“「国力としての防衛力を総合的に考える有識者会議」報告書.” 2022,
https://www.cas.go.jp/jp/seisaku/boueiryoku_kaigi/pdf/20221122_houkokusyo.pdf(검색일: 2023. 1. 5.).

“中国脅威論に関する質問主意書(提出者照屋寛徳),” 質問第七号(平成十八年一月二三日提出).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a164007.htm(검색일: 2023. 1. 5.).

“衆議院議員照屋寛徳君提出中国脅威論に関する質問に対し、別紙答弁書を送付する,” 答弁第七号(平成十八年一月三十一日受領).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b164007.htm(검색일: 2023. 1. 5.).

자료: 新舊 국가안전보장전략의 목차 비교

	舊 국가안전보장전략	新 국가안전보장전략
Ⅰ	**책정의 취지**	**책정의 취지**
Ⅱ	**국가안전보장의 기본이념** 1 우리나라가 내세우는 이념 2 우리나라의 국익과 국가안전보장의 목표	**우리나라의 국익**
Ⅲ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과 국가안보상의 과제** 1 글로벌 안전보장환경과 과제 (1) 파워밸런스의 변화 및 기술혁신의 급속한 진전 (2) 대량살상무기 등의 확산 위협 (3) 국제테러의 위협 (4) 국제공공재에 관한 리스크 (5) '인간 안전보장'에 관한 과제 (6)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글로벌 경제 2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안전보장환경과 과제 (1)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환경의 특성 (2)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도발 행위 (3) 중국의 급속한 대두와 다양한 영역으로의 적극적 진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
Ⅳ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국가안전보장상의 전략적 어프로치** 1 우리나라의 능력·역할 강화·확대 (1) 안정된 국제환경 창출을 위한 외교 강화 (2) 우리나라를 지켜내는 종합적인 방위체제 구축 (3) 영역보전에 관한 대응 강화 (4) 해양안전보장 확보 (5) 사이버안전 강화 (6) 국제테러 대책 강화 (7) 정보기능 강화 (8) 방위 장비·기술 협력 (9) 우주공간의 안정적 이용 확보 및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활용 추진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과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상의 과제** 1 글로벌 안전보장환경과 과제 2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안전보장환경과 과제 (1)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안전보장 개관 (2) 중국의 안전보장상의 동향 (3) 북한의 안전보장상의 동향 (4) 러시아의 안전보장상의 동향

	舊 국가안전보장전략	新 국가안전보장전략
	(10) 기술력 강화 2 미일동맹 강화 (1) 폭넓은 분양에서의 미일 간의 안전보장·방위협력 강화 (2) 안정적인 미군 주둔 확보 3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와의 외교·안전보장 협력 강화 4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적극적 기여 (1) 유엔 외교 강화 (2) 법의 지배 강화 (3) 군축·불확산에 관한 국제 노력 주도 (4) 국제평화협력 추진 (5) 국제테러 대책에서의 국제협력 추진 5 지구 규모 과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 가치를 통한 협력의 강화 (1) 보편적 가치 공유 (2) 개발 문제 및 지구 규모 과제에 대한 대응과 '인간 안전보장' 실현 (3) 개발도상국의 인재 육성에 대한 협력 (4) 자유무역체제의 유지·강화 (5) 에너지·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6)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 강화 6 국가안전보장을 뒷받침하는 국내 기반의 강화와 내외에서의 이해 촉진 (1) 방위 생산·기술 기반의 유지·강화 (2) 정보 발신 강화 (3) 사회적 기반 강화 (4) 지적 기반 강화	
Ⅴ		**우리나라 안전보장상의 목표**
Ⅵ		**우리나라가 우선하는 전략적인 어프로치** 1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국력의 주요 요소 2 전략적인 어프로치와 그것을 구성하는 주요 방책 (1)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환경을 능동적으로 창출하고 자유롭게 개방된

	舊 국가안전보장전략	新 국가안전보장전략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외교를 중심으로 한 대응 전개 ① 미일동맹 강화 ②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의 유지·발전과 동맹국·동지국 등과의 연계 강화 ③ 우리나라 주변국·지역과의 외교, 영토 문제를 포함한 제 현안의 해결을 위한 대응 강화 ④ 군비관리·군축·불확산 ⑤ 국제테러 대책 ⑥ 기후변화 대책 ⑦ ODA를 비롯한 국제협력의 전략적 활용 ⑧ 인적 교류 등의 촉진 (2) 우리나라 방위체제의 강화 ① 국가안전보장의 최종적 담보인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 ② 종합적인 방위체제의 강화와의 연계 등 ③ 소위 방위력 그 자체로서의 방위생산·기술기반 강화 ④ 방위장비 이전 촉진 ⑤ 방위력의 중핵인 자위대원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반 강화 (3) 미국과의 안전보장 면에서의 협력 심화 (4)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빈틈없이 지키기 위한 대응 강화 ① 사이버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대응 능력 향상 ② 해양안전보장의 추진과 해상보안 능력 강화 ③ 우주 안전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대응 강화 ④ 기술력 향상과 연구개발 성과의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관민의 연계 강화 ⑤ 우리나라 안전보장을 위한 정보에 관한 능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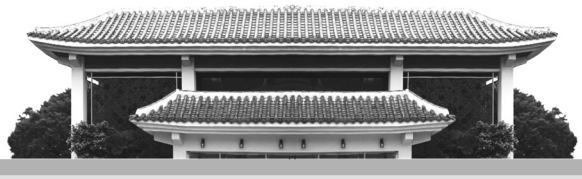
	舊 국가안전보장전략	新 국가안전보장전략
		⑥ 유사를 염두에 둔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대응 능력 강화 ⑦ 국민 보호를 위한 체제 강화 ⑧ 재외국민 등의 보호를 위한 체제와 시책 강화 ⑨ 에너지나 식료 등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위해 불가결한 자원 확보 (5) 자주적인 경제적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안전보장 정책의 촉진 (6) 자유, 공정, 공평한 규범에 기반한 국제경제질서의 유지·강화 (7) 국제사회가 공존공영하기 위한 글로벌한 대응 ① 다국간 협력의 추진, 국제기관이나 국제적인 제도와의 연계 강화 ② 지구 규모 과제에 대한 대응
Ⅶ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화해야 할 국내 기반** 1 경제재정 기반 강화 2 사회적 기반 강화 3 지적 기반 강화
Ⅷ		**본 전략의 기간·평가·수정**
Ⅸ		**결어**

* 주: 편의상 장(章) 제목을 진하게 표시

일본 국가안보 전략과 경제안보

박 성 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교수



Ⅰ. 서론

2022년 12월 16일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새로운 '국가안전보장 전략(2022. 12.16 각의결정)'을 발표했다. 동 전략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안전보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부상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표현하는 부분 등에 대한 주목이 집중되었지만, 이와 더불어, 각의 결정된 일본의 국가안전보장 전략에 경제안보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 속에서 경제안보는 기존 안보의 개념과 비교하여, 어떠한 역할, 기능을 하는 것일까? 사실, 경제안보라는 개념은 기존 전통적인 안전보장의 개념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므로, 경제안보가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편, 경제안보와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 간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일본에서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어 어떻게 변화해오고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본 경제안보 개념의 기원과 변화에 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일본적인 경제안보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도움을 준다. 오늘날 경제안보는 일본, 미국, 중국, 유럽, 한국 등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는 전략 중 하나이지만, 각 국가별로 놓인 상황에 따라 경제안보의 개념, 목적, 수단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안보의 개념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반해 경제안보는 각 국가별로 상이한 의미, 목적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Ⅱ. 종합안정보장과 경제(적) 안전보장

일본에서는 이미 1970년대 중후반~1980년 초반에는 안정보장의 개념을 확장하여, 종합안정보장이라는 틀 안에서 경제안전보장의 개념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1976년 결성된 자민당 계열 정당인 자유클럽에서는 기본이념으로써 '종합적 안전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자원안보,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등의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 또한, 1980년 오히라 수상의 정책연구회 종합안전보장 연구그룹에서 정리한 보고서에서 종합안전보장의 틀 안에서 경제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종합안전보장 연구그룹의 보고서[2]에서는 "안전보장이란 국민 생활을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협의의 안전보장정책과 대비하여, 경제적 안전보장 정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 등 상호의존 체계의 유지, 중간적 방책(중요한 몇몇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의 구축), 자조 노력(어느 정도의 자급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에서는 자조 노력이 과도해지면, 타국이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고, 동맹도 이러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오늘날 일본이 경제안보 전략에서 울타리치기나 협력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이미 1980년경에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 경제안보라는 개념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사용됐다. 당시 일본에서는 1970년대 석유 위기의 발생이라는 상황하에서 주로 자원·에너지 안보 등의 관점에서 경제안보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면,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전략 경쟁의 틀 안에서 경제안보의 개념이 사용되

---

1 中西 寛(1997)「総合安全保障論の文脈 −権力政治と相互依存の交錯−」48巻. 日本政治学会『年報政治学』p. 97−115.

2 政策研究会·総合安全保障研究グループ(1980)『大平総理の政策研究会報告書−5総合安全保障戦略』

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즉, 경제안보의 개념은 향후에도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변화하지 않는 핵심적인 것은 경제안보라는 것이 경제적 대외의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는 점이다. 최근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연준)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리인상이 진행되고 있다. 급격한 달러 가치의 상승은 미국 이외의 국가(특히 개도국)에서 달러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금융 면에서의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본 엔화의 경우, 준기축통화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외화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한적이지만, 향후 일본이 점차 금융긴축기조로 변화함에 따라 국채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등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달러 가치의 급변이나 일본의 국채시장의 동요는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Ⅲ. 2013년 국가안보 전략과 2022년 국가안전보장 전략

2022년 국가안보 전략의 특징을 명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3년 국가안보 전략과 그 내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우선, 2013년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경제안보에 대한 명시적 기술이 없었다. 즉, 당시 국가안보 전략의 틀 안에서 경제안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편입되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2013년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국가안보 상의 전략적 접근방식을 설명할 때, “경제력 및 기술력의 강화”에 더해, 외교력, 방위력 등을 강화하여, 국가안보상의 강인성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2013년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명시적으로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활용하지 않지만, 안전보장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력과 기술력 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

편, 2022년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22년 국가안보 전략에 의하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 경제적인 번영 등 국익을 경제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확보하는 것을 경제안보"라고 정의하고, "경제적 수단을 통한 다양한 위협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일본 자율성의 향상과 기술 등 일본의 우위성, 불가결성의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제시책에 관한 방침 등을 정리하여, 종합적, 효과적, 집중적인 조치를 취해 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맹국·유지국과의 연계 강화를 도모하면서, 민간과 협조하여 공급망 강인화, 중요 인프라 보호, 데이터·정보보호, 기술 육성·보호, 외국의 경제적 위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을 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2022년 안보 전략에서는 2013년 안보 전략에 비해 중국의 부상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2013년 안보 전략에서는 중국의 대외자세나 군사 동향은 군사나 안전보장정책에 관한 투명성의 부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사항(懸念事項)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적하면서도, 한편, "일본과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불가결한 요소이고, 정치, 경제, 금융, 안전보장,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 간에 '전략적 호혜관계'를 구축하여, 이를 강화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반해, 2022년 안보 전략에서는 중국은 센카쿠 영해, 영공 침범 등을 포함하여 현상 변경에 대한 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은 주요한 공적 채권국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제도에 참가하지 않는 등 개발금융 등에 대한 활동에 대한 실태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또한 타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을 이용하여, 상대국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현재 중국의 대외적인 자세나 군사 동향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이며, 일본의 평화와 안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고, 법의 지배에 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인 도전(これまでにない最大の戦略的な挑戦)이고, 일본의 종합적인

국력과 동맹국·유지국과의 연계에 의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중국에 대한 기술은 2013년 안보전략의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에서, 2022년 안보 전략에서는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표기가 변화하였다. 또한, 2013년 안보전략에서는 중국에 대해 정치, 경제, 금융, 안전보장,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 간에 '전략적 호혜관계'의 구축을 강조하였다면, 2022년 안보 전략에서는 경제, 인적 교류 등의 분야에서 중일 쌍방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로의 협력이 가능하고, 일본의 경제발전과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중국과 적절한 경제관계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안보 전략에서는 중국에 대해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인 도전으로 표현하고 있다.

Ⅳ.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의 특징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2년 일본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안보 전략의 틀 안에 경제안보를 명시적으로 편입하고 있다. 즉, 경제안보는 안보 전략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은 안보 전략의 일부를 구성하는 전략이면서 한편, 성장전략이나 외교·통상정책의 일부를 구성하는 전략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기시다 내각이 내걸고 있는 경제안보는 안보 전략, 성장전략, 외교 전략 등의 접점(연결고리)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높다.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은 단순히 대외의존 등에 의해 초래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대외적인 위협으로부터 국익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성장이라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경제 성장전략으로서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제안보라는 용어는 경제+안보라

는 용어로 구성되며, 상당히 다의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특히 경제에 초점을 둔 경제안보(성장전략)와 안보에 초점을 둔 경제안보(리스크 관리, 위협으로부터 국익을 수호)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은 경제안보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울타리치기(가코이코미: 囲い込み)와 동맹국 등과의 협력을 중시한다. 예를 들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기술·물자에 대해 국내 연구개발 및 생산거점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 기술·산업에 대한 '울타리치기'를 강화하는 한편, 국경 밖에 있는 미국, 대만 등 유지국·협력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기존 일본의 산업정책에서 자국 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최근 일본의 경제안보전략에 연계된 산업정책에서는 TSMC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이외의 기업도 필요에 따라 지원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경제안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점으로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을 중시하고 있다. 전략적 자율성이란, 사회경제 활동의 유지에 불가결한 기반을 강화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략적 불가결성이란, 국제사회 전체의 산업구조에서 일본의 존재가 국제사회에서 불가결한 분야를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본 입장에서는 타국이 병목지점·급소(choke point)에 해당하는 기술이나 산업 등을 확보하고 있다면,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편, 일본이 병목지점·급소에 해당하는 기술이나 산업을 확보할 경우, 상대편이 자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본의 경제안보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제는 외환법(外為法,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있다. 1987년 이후부터 외환법에 의거하여, 안전보장상 우려가 있는 화물 수출과 기술 제공에 대해서 경제산업대신의 허가제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외환법에 의거하여, 대내직접투자에 대한 심사(審査)부(付) 사전신고제(재무대신 및 사업소관대신)를 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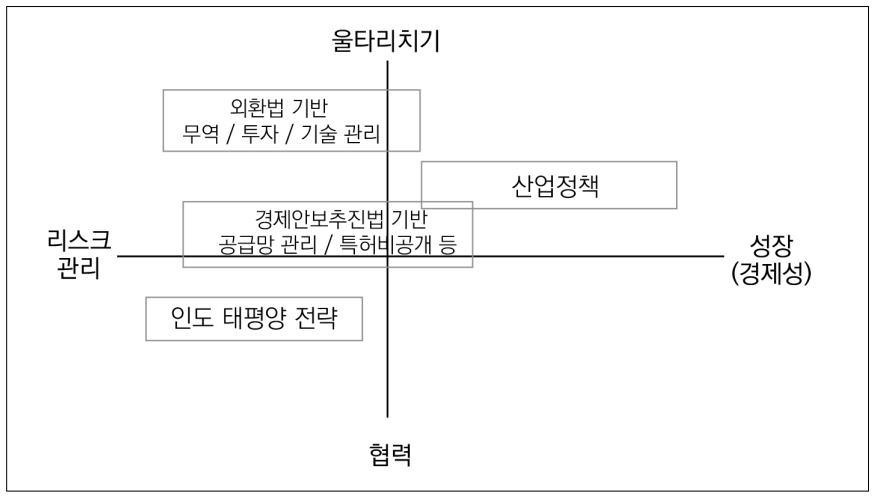
외환법 개정(2019년 10월 25일 개정, 2020년 5월 8일 시행)을 통해 외국 등에 의한 대내직접투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또한, 2021년 11월 외환법 개정(2022년 5월 시행)을 통해 간주수출관리가 강화되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2022년 5월 11일 가결)은 공급망 강화(2장), 인프라 안전성 확보(3장), 첨단 기술관민협력(4장), 특허비공개(5장)를 주요 골자로 한다.

〈표 1〉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개요

장	내 용	비고
제1장 기본방침 책정	안전보장의 확보의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 규제는 경제활동에 주는 영향을 고려	
2장 중요 물자 안정적 공급 확보에 관한 제도	중요 물자 안정공급의 확보를 위해 중요 물자의 지정, 사업자 계획의 인정, 지원 조치	〈공급망 강화〉 반도체 등 국내생산을 지원, 단, 조달처 및 보관 상황 등에 대한 공개에 대한 노력의무
3장 기간 인프라의 안정적 제공 확보에 관한 제도	기간 인프라의 중요 설비 의 도입, 유지관리 등 위탁의 사전 조사, 권고/명령 등을 조치	〈인프라 안전성 확보〉 안보상 위협이 되는 해외제품이나 시스템 국내 도입을 정부가 심사
4장 첨단 중요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제도	첨단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의 촉진과 적절한 활용을 위해, 자금지원, 관민협력 지원을 위한 협의회 설치, 조사연구업무의 위탁(싱크탱크) 등 설치	〈관민기술협력〉민간에 대한 지원, 단 민간에 비밀유지 의무 부과
5장 특허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제도	특허에 관한 공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특허출원 제한 조치	군사이용할 수 있는 민간특허출원은 비공개

자료: 박성빈 (2022)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리스크 관리와 경제성장」 허재철 등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림 1〉 일본 경제안보의 2가지 핵심축과 정책수단



자료: 박성빈 (2022)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리스크 관리와 경제성장」 허재철 등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전략을 무역 및 투자관리, 기술관리, 인도태평양 전략, 산업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안보 전략과 관련된 정책을 경제안보의 목적과 핵심 전략(울타리치기와 협력)에 따라 그 내용을 분류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외환법 기반 정책(무역, 투자, 기술 관리)은 기본적으로 리스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울타리치기에 해당하고, 산업정책은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울타리치기에 해당한다. 경제안전추진법 기반 공급망 관리·특허비공개 등은 기본적으로 리스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울타리치기에 가깝지만, 경제성장과 협력의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2장(공급망 강화)에서는 반도체 등 국내 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에 대해 조달처 및 보관 상황 등에 대한 공개에 대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기업에 대해 지원은 하되,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조달처 등에 대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인도 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의식하면서도, 미

국 등 동맹국, 유지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2022년 국가안보 전략에서는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경제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여전히 중국과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상당 부분 중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의 중국에 대한 시각은 '차이너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에 반영되어 있다. 일본 기업은 2005년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중국 내 반일 시위의 발생을 계기로 하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거점을 중국에 집중시키는 것을 회피하여, 중국 이외의 국가·지역으로도 분산하여 투자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은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의 디커플링(탈중국화)과는 차이가 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탈피할 것을 추진하지만, 중국에 대한 완전한 탈중국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중국은 여전히 일본에게 중요한 해외생산거점이자, 소비시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다. 2021년 일본국제협력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생산의 해외현지법인을 중국에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75.4%로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2위와 3위는 태국(46.3%), 미국(38.3%)이다. 또한, 중국은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유망국가로 득표율 47%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즉, 미중전략 경쟁이나 코로나 위기 등의 공급망 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은 여전히 중국을 유망한 해외생산거점(공급망)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은 적어도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인건비 상승이나 미중전략 경쟁에 따른 중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의해 일본 기업의 탈중국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일중간 경제협력관계는 큰 틀에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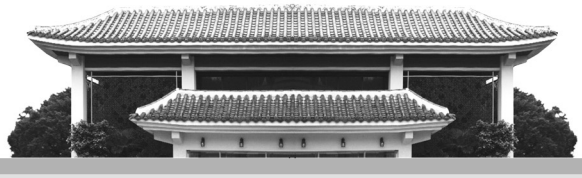
참고문헌

国家安全保障会議. 2013,『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平成25年12月17日(閣議決定).
国家安全保障会議. 2013,『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令和４年12月16日(閣議決定).
政策研究会·総合安全保障研究グループ. 1980,『大平総理の政策研究会報告書-5総合安全保障戦略』.
中西 寛. 1997,「総合安全保障論の文脈 -権力政治と相互依存の交錯-」48巻. 日本政治学会『年報政治学』p. 97-115.
박성빈·이왕휘·김한성. 2021, "미국과 일본의 탈중국 정책 이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무역·투자: 신남방정책에 주는 함의." 『미래성장연구』, 7(2), 69-93.
박성빈. 2022,「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리스크 관리와 경제성장」허재철 등『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성빈·김지영. 2022,「아베-시진핑 이후 중일관계의 변화-중일 간 정치 갈등은 경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일본연구』94호, 130-160.

‘국가방위전략’ 평가와 함의: 일본의 방위력과 방위장비이전 3원칙

권 태 환

전 주일국방무관



Ⅰ. 일본 국가방위전략 개정의 배경과 위협 인식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야기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10개월이 지났지만,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치열한 소모전이 격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확전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타이완을 둘러싼 중국의 무력시위 등이 격화되면서 동아시아의 안보 불안정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무엇보다 북한의 무차별적인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이 주목된다. 지난 1990년대 이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온 북한이 금년들어 SLBM과 ICBM을 포함한 다양한 미사일 발사는 물론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하고 핵 타격 훈련에 이르는 총력적인 도발 태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각의 결정을 통해 전략 3문서(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 방위력정비계획) 개정을 공포하였다. 국가안보전략은 2013년에 최초 제정되어 9년 만에 개정이다. 국가방위전략은 이전의 방위계획대강으로서 방위정책의 방향과 전력증강 목표를 제시하는 전략문서로서 1976년 최초 제정되어, 1995년, 2004년, 2010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금번 6번째 개정이 된다. 방위력정비계획은 이전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으로서 전력증강 목표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소요예산과 도입장비를 연도별로 구체화한 문서이다. 그러나 금번 개정은 '일본 안보정책의 획기적 변화'이자 '방위력의 근본적 변화'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향후 5년 이내 방위비의 획기적 증가(GDP 1%→2%, 23-27년 43조엔) 등에 국내는 물론 주변국들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국가방위전략 개정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위협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동아시아 지역으로 돌려본다면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인다. 첫째는 인도태평양지역을 둘러싼 미중의 전략적 경쟁의 심화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

상이 남중국해, 타이완, 동중국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둘째는 타이완 문제에 대한 중국 시진핑 정권의 무력시위의 현저한 증가이다. 여기에는 펠로시 미국 국회의장을 비롯한 바이든 정부의 타이완 정책이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타이완 정부의 독자적 대외정책 추진 등에 의해 시진핑 주석은 무력불사용 배제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이다. 에너지와 식량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으로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가 본격화되자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대만침공 우려와 북한의 대러 전략적 접근이 주목된다. 최근 동중국해는 물론 동해 상에서 이루어지는 중러 함정 및 전투기훈련은 물론 전쟁 물자지원, 나아가 탄약과 장비 제공 여부가 문제시되는 등 북-중-러의 전략적 연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과 연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전이 미래의 전쟁 양상 나아가 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주전, 사이버전, 전자전 등의 비대칭적 공격과 AI, 무인드론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정보전, 기후변동 등 글로벌 안보환경과 과제가 확산되어 가기 때문이다. 다섯째, 핵전쟁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사용' 제기와 함께 북한도 '선제적 핵 공격에 의한 방어역량 무력화'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핵 보유국인 일본에 있어 미국의 핵확장억제에만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위협인식이 무엇보다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제 국가안보는 더 이상 자국의 능력만으로 가능한 시대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분산을 위한 북-중-러 연계를 주시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역내 분쟁이 바로 일본의 안보상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금번 국가방위전략 개정은 이러한 위협 인식을 토대로 미일 동맹의 강화와 함께 위협의 발생을 억제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Ⅱ. 국가방위전략의 책정과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 확대

1. 국가방위전략 책정 취지와 전반적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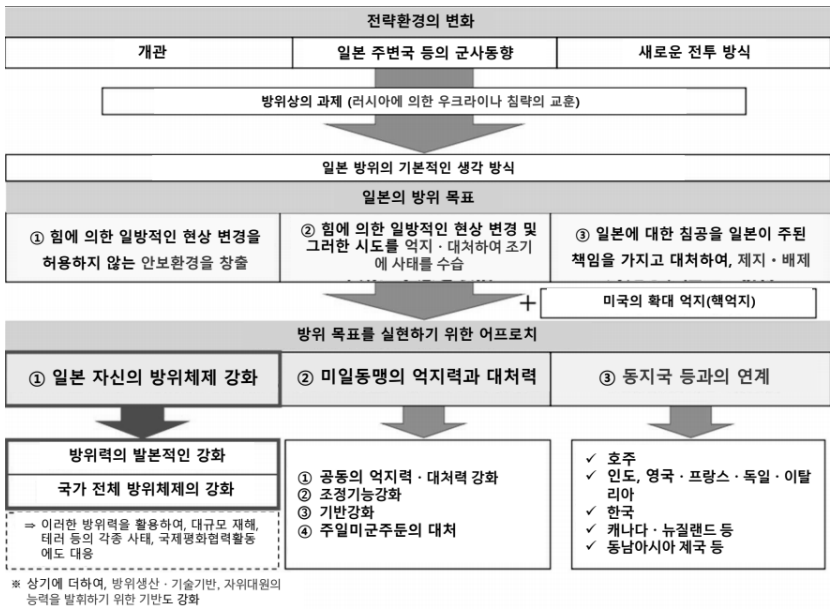
일본 정부는 금년도 미국이 새로운 국가방위전략을 책정하였으며, 미일 양국이 전략적 조정 및 방위협력을 통합적으로 진행한다는 구상하에 지난 1976년 제정되어 자위대를 핵심으로 한 방위력의 정비 및 유지, 운용의 기본적 지침인 방위계획대강을 대신해 일본의 방위목표, 방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 및 수단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국가방위전략'을 책정하였다.

일본의 국가방위전략은 기본방침으로 방위력 건설은 ① 상대의 능력과 전술에 대처할 수 있으며 ②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한 대응능력으로서 ③ 언제, 어떤 형태로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과 시험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지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위목표로서 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용납하지 않는 안전보장환경을 창출하며 ②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과 시험을, 동맹국과 우방국 등과 협력하고 연계하여 억지 및 대처하고,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며 ③ 만일 인본에 대한 침공이 발생하는 경우, 일본이 주체적 책임을 가지고 대처하며, 동맹국 등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것을 저지 및 배제한다. 특히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는 핵 억지력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확장억제가 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방위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방안으로 ① 일본 자신의 방위체제의 강화, 그 핵심인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며, 국가 전반적 방위 체제를 강화 ② 미일동맹의 억제력과 대처력 강화: 미일의 의사와 능력을 보여줌 ③ 우방국 등과의 연계 강화로서 가능한 많은 나라와의 연계 강화이며, ④ 방위력 그 자체로서의 방위생산·기술기반, ⑤ 방위력의 핵심인 자위대원의 능력 발휘를 위한 기반 강화를 제시하였다.

〈표 1〉 국가방위전략 전반적 구상



* 출처 : 국가방위전략 요지(방위성 홈페이지)

2. 국가방위전략 주요 내용

국가방위전략은 기존 방위계획대강에서 10년을 목표로 전력증강 목표의 구체적 장비 수치를 별표로 제시해 왔지만, 금번에는 새로운 방위력정비계획의 별표로 제시하면서 장래 체제로 발표하고 장비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향후 5년간의 최우선 과제 달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 현 보유 장비품을 최대한 유효하게 활용해야 하며, 가동율 향상, 탄약 연료 확보, 방위시설 강인화 등이 중요하며, ② 장래의 핵심 능력을 집중 강화 ③ 인구감소, 소자, 고령화를 근거로 무인화, 자율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방위비 재원 확보(5년 이내 43조엔)와 전력증강 목표 설정의 유동성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1) 일본 자신의 방위체제 강화

근본적 방위력 강화는 일본에 대한 침공 억제에 중점을 두고 미일 동맹의 억제력 대처력 강화와 함께 우방국들과의 글로벌 방위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주요 쟁점인 반격능력은 자위대의 스탠드 오프 방위능력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무력행사 3 요건을 준수해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해 나간다. 또한 전체의 방위체제 강화에는 국가 총력전 구상이 주목된다. 외교력, 정보력, 경제력, 기술력 등 국력통합과 함께 정책 수단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일원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미래전장 성패의 핵심으로 영역횡단 작전 능력의 강화로서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과 민군 협력 중요성을 제기한다. 지난 2007년 제정된 국민 보호법 등을 반영한 자위대의 기동 전투력을 위한 민간선박 항만 임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해상 교통로 중요성과 지부티 등 해외 거점의 안정적 장기적 운용, 부대 배치 조정에 있어 지역의 특성 현지 경제 여건 등이 지침으로 반영되었다. 이를 위해 4장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중시 능력으로 다음 7가지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중시하는 능력

중시 능력	구체적 방안 제시
① 스탠드 오프 방위능력	○ 다양한 지점, 중층적으로 함정 등을 저지·배제하는 필요충분 능력 ○ 각종 플랫폼에서 발사 가능 ○ 고속 활공 비상이나 극초음속 비상 등 요격 곤란 능력 강화 ○ 국산 미사일 증산체제 확립 전에 충분한 능력의 조기 확보를 위해 외제 스탠드 오프 미사일 취득
② 통합방공 미사일 방위능력	○ 극초음속 무기 등에 대한 대처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 ○ 미사일 방어로 공해 및 일본 영역 상공에서 미사일 요격 ○ 공격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조치로서 상대 영역에서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능력으로 스탠드 오프 방위 능력 등을 활용. 미사일 방어와 결합하여 미사일 공격 억제
③ 무인 자산 방위 능력	○ 무인장비에 AI 및 유인장비와 결합하여 비대칭 우세 획득 가능

중시 능력	구체적 방안 제시
④ 영역 횡단 작전 능력	○ 우주·사이버·전자파의 영역의 방해능력을 포함한 능력을 강화·확충 ○ 육해공 방위력: 함정·전투기 등을 착실히 정비
⑤ 지휘 통제 정보 관련 기능	○ AI 도입 등을 포함해 네트워크의 항탄성 및 ISRT 능력 강화 ○ 정보본부를 중심으로 분석능력 강화 ○ 가짜 정보 유포를 포함한 정보전 등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도 강화
⑥ 기동 전개 능력 국민 보호	○ 자위대의 수송력 강화, 민간 수송력 활용, 평소 공항·항만시설 등 이용 ○ 기동전개 능력을 주민대피에 활용하여 국민보호 임무 실시
⑦ 지속성 강인성	○ 필요한 충분한 탄약, 유도탄, 연료를 조속히 보유.장비품 가동률 향상 ○ 주요 사령부의 지하화·구조 강화, 시설 재배치 등 ○ 자위대원의 계전능력 향상을 위해 위생기능도 강화

향후 자위대 체제 정비를 위해서는 상기 제시된 7개 중시 능력을 자위대별로 구체적 역할을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제정비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향후 자위대 체제정비 구상 방향

역할 주체	향후 자위대 정비체제 구상 방향
통합운용 능력의 강화	기존 조직의 재검토를 통해 상설 통합사령부를 창설, 통합 운용에 이바지하는 장비 체계 검토
육상자위대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신속한 기동·분산 전개, 지휘통제·정보 관련 기능을 중시한 체제 정비. 사이버를 중심으로 한 영역 횡단 작전 기여
해상자위대	방공 능력, 정보전 능력,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 등의 강화, 성인화·무인화 추진 수중 우세를 획득·유지할 수 있는 체제 정비
항공자위대	기동 분산 운용, 스탠드·오프 방위 능력 등의 강화.우주 이용의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정보본부	정보전 대응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타국의 군사활동 등을 파악하고 분석·발신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

2)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처력

미일 양국의 공동억제 대책 등 전략의 정합과 함께 우선 목표로 제시되었다. 동맹의 현대화 및 공동능력의 강화, 알본 방위는 물론 역내 평화 및 안정 역할 확대 등이 제시되어 향후 자위대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 하의 역할 확대가 예상된다. 이는 금번 일본 정부의 발표에 대한 미국의 환영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첫째, 미일 공동의 억제력/대처력 강화이다.

우주 등 제반 분야의 영역 횡단작전과 함께 반격능력, 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 태세 강화로서 방공작전, 대수상전, 대잠수함전, 기뢰전, 수륙양용작전, 낙하산 작전, 자료수집 ,경계감시 , 정찰 ,타켓팅 (ISRT) 장비 및 시설엄호, 후방지원작전과 이를 위한 훈련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이 예상되며, 이를 통해 미일 통합 전략이 보다 구체화될 것이다.

둘째 동맹조정 기능 강화로서 미일 동맹과 우방국 연계를 강화하며, 동맹조정 매카니즘(ACM)을 적극 활용해 나간다.

셋째, 공동 대체 기반의 강화이다.

모든 부대 및 작전 수준 내에서의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간다. 첨단기술 연구장비와공동개발 및 생산, 상호호환성 향상을 도모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일본의 방산수출 확대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으로 관련 동향이 주목된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의 공유 및 강화, 글로벌 공급망 구축도 명시되었다.

넷째, 주일 미군의 안정적 주둔 강화와 동시에 오키나와 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3) 우방국과의 연계로서 인도태평양 전략 비전의 실현

미일 동맹과 함께 지역 및 각국의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 다층적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호주 및 인도와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NATO 등과의 상호 관여를 강화한다. 한국과는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과 미일 동맹 및 한미동맹의 억제력 ,대치력의 강화와 한미일 공동훈련 등을 연계 강화한다. 캐나다, 몽고, 태평양, 도시국, 인도양 연안국 등 우방국과의 연계를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 비전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첫째, 한국과의 관계 설정이다. 우선순위도 호주, 인도, 유럽 등에 이어 제시되었지만 가장 중요시하는 미국과의 동맹 억제력과 대처력 강화가 언급되고 있으며, 일본에 직접적이자 군사적 위협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대처와 이를 위한 한미일 공동훈련 등이 언급되어있다. 추가적 명시가 없음은 한편으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위협에 대한 구체적 협력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만 문제를 포함한 역내 유사시 대처를 위한 전략적 의사소통과 대처를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이유이다.

둘째, 중국과의 관계 언급이다. 국가방위전략서에는「건설적 안정적인 관계」구축을 위해 일중 안보 대화를 포함한 다층적 대화 및 교류를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일중 방위 당국간 해공 연락 매커니즘 구축을 제안하면서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모색하고 있다. 위협과 별도로 필요한 분야에서 적극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역내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 한반도 주변 해공역을 대상으로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역내 다자간 안보대화와 구체적 협정 체결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와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건설적 제안은 명시되지 않았다. 최근 북한의 무차별적인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양태를 고려한다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건설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향후 우리의 국방전략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4) 방위력 그 자체로서 방위생산 및 기술기반

'방위력 그 자체로서 방위생산 및 기술기반'이라는 테마로 자국에서 장비품의 개발, 생산, 조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새로운 전투에 필요한 첨단기술을 방위장비품에 반영하기 위해 불가결한 기반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방위생산기반의 강화로서 적정한 이익확보를 통한 사업의 매력화와 공급망을 포함한 전반적 기반 강화, 새로운 참여 촉진 시책 추진, 국가의 제조설비등의 보유화 검토 등이다. 둘째는 방위기술기반의 강화이다. 방위산업이나 비방위산업의 기술을 조기 장비화로 연결하는 대응을 적극 추진하며, 일본이 주도하는 국제 공동개발, 민생 첨단기술 적극 활용 틀 구축 등이다. 셋째, 방위장비 이전의 추진으로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나 운용지침을 비롯한 제도의 재검토이다. 민·관 일체가 된 방위장비 이전 추진을 위해 기금을 창설하여 기업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국제적인 안보협력에 대한 대처로서 대규모 테러와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중요 인프라에 대한 공격, 대규모 재해,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부서의 연계 강화와 국제적 협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방위력의 핵심인 자위대원의 능력 발휘를 위한 기반강화로서 인적 기반의 강화와 위생 기능의 변화 등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전문가로 활용하며, 여성대원의 적극적 활용과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의 인재 양성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주목된다.

Ⅲ. 일본의 국가방위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

일본의 전략 3문서 개정을 계기로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새로운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개정된 일본의 전략 3문서에는 중국·북한·러시아를 가상

적국으로, 미국·한국·타이완은 미일동맹과 함께 협력할 국가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며, 러시아는 '중국과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맞물려, 안보상 강한 우려'라고 규정했다. 특히 북한을 '종전보다 더욱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지적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는 최근 북한의 무차별적인 도발과 핵 및 미사일의 고도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과 연계된 상시적 도발 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국가방위전략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와 자위대의 '근본적 방위력 전환' 모색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역내 군비경쟁의 가속화도 우려된다. 특히 핵심 쟁점으로서 향후 자위대는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2023년부터 토마호크 미사일을 500발을 도입하고, 자위대의 12식 미사일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해상 및 공중 타격수단으로 새롭게 개발된다. 적국 군사 시설 정밀 타격을 위한 24시간 위성 감시 태세와 우주전과 사이버전, 전자전 등 다영역작전 능력과 통합전력 발휘를 위한 자위대 부대 개편 등이 본격 추진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까지 2%인 43조엔으로 증액하는 것을 새로운 방위력 정비계획에 명시했다. 그 결과, 미일 동맹과 인도태평양전략 차원에서 자위대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일본의 국가방위전략은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 4.0'에도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군사적 신뢰를 제고함은 물론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며, 실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나아가 인도태평양전략에 있어 역내 안정을 위한 한미일 협력과 상호운용성을 높여나가는 기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와 영토 문제 등 쟁점을 넘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도 향후 한일 양국의 전략적 의사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한 우리의 대응을 제시해 본다.

첫째, 군사적 대비태세(Readiness)에 대한 실효적 대비이다. 6.25 전쟁을 경험한 우리에게 역사가 주는 교훈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는 한국과 일본이 핵을 보유한 북한, 나아가 북-중-러의 군사적 연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의 핵확장 억제는 물론 실질적인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 불과 3분, 7분 이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직면하는 한일 양국이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에 의한 실질적인 군사적 논의와 대비태세의 확립이 시급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위기 상황이라는 유동적 변수를 포함한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현실적 대비는 물론 미래전 대비를 위한 실질적인 국방혁신을 가속화시켜 나가야 한다. 자위대의 근본적 방위태세 변화는 질적+양적 변화가 불가피한 안보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정부 출범 이후 지난 7개월 사이 가장 가시적 변화가 미일동맹 및 국방부의 군사적 대비태세 변화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제는 지난 유엔 총회와 캄보디아 정상회의를 통해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방혁신이 임기 내 이루어져야한다.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정부는 향후 5년간 군 구조 개편과 군사력 건설 등 국방비로 총 33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포함, 국방정책과 각종 사업 추진계획을 연도·사업·부대·기능별로 구체화 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혁신은 부단히 보완되고 국제안보정세 변화를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국가방위전략에 의한 전력증강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안보전략 및 인도태평양전략, 국방전략서 제정 등에 있어 국가안보 관련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노력이다. 금번 일본의 반격능력에 대한 마이니치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12월 17-18일, 성인 1,013명)를 보면 찬성이 59%, 반대가 26%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국민들의 반전 의식, 전수방위

원칙에 대한 우려를 고려시 놀라운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시대적 요구 뿐 아니라 일본 정부(방위성)의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반도 안보정세의 엄중함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현실적 의미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전략적 공감대를 위해 정부(국방부)의 설명 책임 및 실질적 대안 제시가 중요한 시점이다.

넷째, 한일 관계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동시다층적 협력이 행동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한일관계가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층적이며 다원화된 교류협력이 행동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위드코로나 시대, 무비자 입국 등 조치를 통해 현재 1일 2만 명 이상의 인적교류가 한일 양국의 현실이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신뢰회복이 가능한 분야는 한일 양국의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일 군사적 대처이다. 다양한 채널의 교류협력은 물론 한일 및 한미일 공동훈련의 실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한일관계 개선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일 정상회담이 어렵다면 국민들의 위협 불안 해소를 위해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조기에 추진하는 등 한반도 전쟁 억제를 위해 필요한 군사교류협력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일 방산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K-방산에 대한 성과가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일본의 국가방위전략서에도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시의지가 담겨있다. 한일 양국이 첨예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오늘의 선진국을 이룰수 있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토대로 향후 양국의 방산 협력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유사시 상호운용성을 확보활 수 있으며, 첨단 과학기술분야 특히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미래전장에서의 국제적 룰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기된 탄약 및 장비의 수급 등을 포함한 현실적 군사대비태세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한 한국 방사청과 일본 방위장비청, 한일 방산업체간 긴밀한 인적교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일 관계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금번 일본의 국가방위전략에서 제시된 내용은 우리의 국방혁신과 공동의 관심 및 쟁점 과제이며, 미국과의 동맹을 축으로 한반도 안보는 물론 나아가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불가결한 과제이다. 또한 현실적이며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은 시급한 당면과제인 것이다. 일본은 국가방위전략서에서 향후 5년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동일한 안보여건을 맞이하고 있다.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한일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문헌

防衛省(2022),『防衛白書』, 東京.
外務省(2022),『外交青書』, 東京.
防衛研究所(2022),『中国の安保報告書』, 東京.
防衛研究所(2022),『東アジア戦略概観』. 東京.
防衛省(2022),『国家安保戦略書』, 東京.
防衛省(2022),『国家防衛戦略』, 東京.
自民党(2022),『新たな国家安全保障戦略等策定のための提言』. 東京.
内閣官房(2022),『新たな国家安全保障戦略等の策定に関する有識者との意見交換』. 東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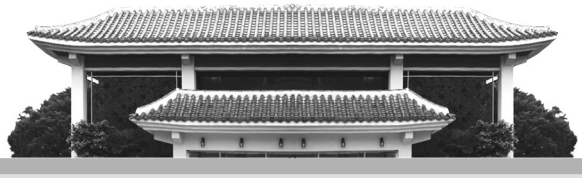
한국국방외교협회(2022),『주간국제안보군사정세 2022』. 서울.
한국군사문제연구원(2022), 뉴스레터. 서울
한국군사학회(2020),『새로운 안보환경과 한국의 생존전략』. 서울.
국방부(2020),『국방백서』. 서울
김황록(2020).『핵 미사일 고도화와 미국 상대하기』. 서울.
홍규덕 외(2022).『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한국의 국방혁신』. 서울.
홍규덕 외(2022).『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와 정보역량 강화』. 서울.
정호섭(2021).『미중 패권경쟁과 해군력』. 서울.
신각수(2021),「미중 전략적 경쟁시대의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한일군사문화연구 제33편』.
윤석준(2022).「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월간 KIMA. 51호』. 서울
권태환(2021),「2021년 일본의 안보정책 평가 및 시사점」.『합참 (제90호)』. 서울.

‘방위력정비계획’의 주요내용 평가와 함의

- 자위대 체제, 방위력증강 7대 사업, 소요경비를 중심으로

송 화 섭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안보관련 정책 3 문서의 하나로 발표된 방위력정비계획은 기존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대신에 발표된 것이지만, 방위계획의 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합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위계획의 대강에 포함되어 있던 자위대 체제의 목표와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군사력 정비규모가 방위력정비계획에 〈별표〉 3과 2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방위계획의 대강이 대략 10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 5년을 대상기간으로 설정했었는데, 방위력정비계획은 전체적으로는 10년을 대상기간으로 하지만 향후 5년 간에 달성할 목표와 10년 간에 달성할 목표를 나누어 〈별표〉 1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은 일본이 발표한 방위력정비계획을 중심으로 자위대 체제 변화, 근본적 방위력 강화를 위한 7대 사업, 소요 경비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한국의 군사력 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Ⅰ. 방위력정비계획의 주요 내용

방위력정비계획 문서는 1장에서 방위력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2장에서 근본적인 방위력 증강을 위한 7대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7대 사업은 첫째, 일본에 대한 침공을 억지하기 위해서, 원거리로부터 침공 전력을 저지·배제할 수 있도록 ①스탠드오프 방위능력과 ②통합 방공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며, 둘째, 만일 억지에 실패하여 일본에 대한 침공이 발생했을 때는 위의 능력에 더하여 유인장비 및 무인장비를 활용하며, 수중·해상·공중 등 다영역에 걸쳐서 우월한 능력을 발휘해 비대칭적 우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③무인장비 방위능력, ④영역횡단작전능력 ⑤지휘통제·정보관련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신속하고 끈질기게 상대방의 침공 의도를 단념시키기 위해 ⑥기동전개능력·국민보호, ⑦지속성·강인성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3장~5장에서는 일본 방위의 3대 기축인 자위대의 강화, 미일동맹의 강화, 동지국 등과의 연계 강화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6장에서는 방위력을 지탱하는 요소(훈련·연습, 해상보안청과의 연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정책입안기능의 강화), 7장에서는 국민의 생명 보호 및 국제안보협력 방향이 설명되어 있고, 8장에서는 정책적인 시급성, 중요성이 높은 분야에서의 장비의 조기 조달을 위해, 5년 이내 장비화하고 10년 이내에 본격 운용을 시작한다는 조기장비화를 위한 시책이 소개되어 있다.

9장에서는, 방위생산·기술기반 10장에서는 인적기반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11장에서는 장비와 인력의 최적화 방안이 설명되어 있고, 12장에서는 정비규모, 13장에서는 소요경비 14장에서는 오키나와의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이 지속된다는 유의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별표〉 1에서는 근본적으로 강화된 방위력 목표와 달성 시기 〈별표〉 2는 주요장비의 정비 규모, 〈별표〉 3에서는 향후 10년 후의 자위대체제가 소개되어 있다.

1. 자위대 체제 변화

먼저 자위대 체제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구 방위계획의 대강에서 제시되었던 목표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에서 제시된 것과 방위력정비계획에서는 상비자위관 정원을 기존의 15만 1천명에서 14만 9천명으로 2천명 삭감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정년 연장 등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향후 10년간 상비자위관은 감소될 수 밖에 없다는 인적 자원의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비자위관의 정원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자위관의 경험이 없더라도 예비자위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방침 등을 고려하여 예비자위관 제도가 새롭게 정착되면 예비자위관의 정원을 결정해 나가기 위해 목표정원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 자위대의 정원은 별도로 소개되지 않았는데, 인력 운영의 최적화 차원에

서 공동부대, 해상, 항공자위대의 인력 소요를 반영하여 육상자위대 2천명을 다른 자위대 소속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통합운용체제의 강화를 위해 상설 통합사령부를 창설하며, 이미 계획되어 있던 사이버 방위부대의 확대 및 해상수송부대의 신편을 추진한다. 사이버방위부대는 현재 약 890명 체제에서 2027년까지 약4,000명 체제로 증편하고, 사이버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20,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육상자위대는 1개 여단을 1개 사단으로 개편하고, 구 대강에서는 기동운영부대가 3개 사단 및 4개 여단 수준이었으나, 방위력정비계획에서는 14개 사단 및 여단을 기동운용부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스탠드오프미사일 부대로 기존의 지대함미사일연대는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2개 장사정 유도탄 부대를 신설한다. 지대공유도탄부대는 7개에서 8개로 증편하고, 전자전, 무인장비 활용, 정보능력 강화를 위해 전자전부대, 다용도 무인항공기 부대, 정보전부대를 각각 1개씩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도 무인장비 활용, 정보능력 강화를 위해 무인기부대 2개대, 정보전부대 1개대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지스탑재 호위함을 8척에서 10척으로, 2018년 육상배치형 이지스시스템 계획을 폐기하면서 계획하였던 이지스시스템 탑재함 2척을 건조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해상자위대의 작전용항공기는 190대에서 170대로 감축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무인장비의 활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항공자위대는 항공우주자위대로 명칭을 바꾸고, 항공경계관제부대는 28개 경계군에서 4개 항공경계관제단으로 통합편성되며, 정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작전정보부대가 신편된다. 항공자위대의 작전기는 370대 목표에서 60대가 증가되어 430대를 정비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그중에서 전투기는 290대에서 320대로 30대 증강되었다.

〈표 1〉 자위대 정비 목표(별표 3)

구분	자위대 체제			
			구 방위계획 대강 목표	방위력정비계획 목표(2032년)
공동부대	사이버 방위부대 해상 수송부대		1개 방위대 1개 수송군	1개 방위대 1개 수송군
육상자위대	상비자위관 정원 즉응예비자위관 정원		151,000명 8,000명	149,000명
	기간부대	작전기본부대	8개 사단 6개 여단 1개 기갑 사단	9개 사단 5개 여단 1개 기갑 사단
		공수부대 수륙기동부대 공중기동부대	1개 공정단 1개 수륙기동단 1개 헬리콥터단	1개 공정단 1개 수륙 기동단 1개 헬리콥터단
		스탠드오프미사일 부대	5개 지대함 미사일 연대 2개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 대대	7개 지대함 미사일 연대 2개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 대대 2개 장사정 유도탄부대
		탄도미사일방위부대	2개 탄도미사일방위대	
		지대공유도탄 부대	7개 고사 특과군/연대	8개 고사 특과군
		전자전부대 (이 중에서 대공전자전부대)		1개 전자작전대 (1개 대공전자전 부대)
		무인기 부대		1개 다용도 무인 항공기 부대
		정보전 부대		1개 부대
해상자위대	기간부대	수상함정부대 (호위함부대 소해함정부대) 잠수함 부대 초계기 부대 (이 중에서 고정익 초계기부대) 무인기 부대 정보전 부대	6개군 (21개대) 6개 잠수대 9개 항공대	6개군 (21개대) 6개 잠수대 9개 항공대 (4개 대) 2개대 1개 부대
	주요장비	호위함 (이 중에 이지스시스템탑재 호위함) 이지스시스템 탑재함 초계함 잠수함 작전용 항공기	54척 (8척) 12척 22척 약 190대	54척 (10척) 2척 12척 22척 약 170대
항공자위대	주요부대	항공 경계 관제 부대 전투기 부대 공중 급유 수송 부대 항공 수송 부대	28개 경계군 1개 경계항공단(3개 비행대) 13개 비행대 2개 비행대 3개 비행대	4개 항공경계관제단 1개 경계항공단(3개 비행대) 13개 비행대 2개 비행대 3개 비행대

구분	자위대 체제			
			구 방위계획 대강 목표	방위력정비계획 목표(2032년)
		지대공 유도탄 부대 우주 영역 전문 부대 무인기 부대 작전 정보 부대	4개 고사군(24개 고사대) 1개 대 1개 대	4개 고사군(24개 고사대) 1개 대 1개 비행대 1개 대
	주요 장비	작전용 항공기(이 중에 전투기)	약 370대(약 290대)	약 430대(약 320대)

2. 근본적 방위력 증강을 위한 7대 사업

1)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은 2020년에 이미 구축하도록 계획되어, 12식 지대함 미사일을 개량하여 사정거리를 늘리고 지상발사형, 함정발사형, 항공기발사형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지상발사형은 2025년도까지, 함정발사형은 2026년도까지, 항공기발사형은 2028년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한다. 또한 구 방위계획의 대강에서 이미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 및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며, JSM(Joint Strike Missile) 및 JASSM(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의 취득도 계획되어 있었다.

이번 방위력정비계획을 통해서는 이러한 무기의 개발 및 양산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는 점과 스탠드오프 미사일의 운용능력 향상을 위해 잠수함 탑재 수직미사일발사시스템(VLS), 수송기 탑재형 발사시스템도 개발하도록 했다는 것이 새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하도록 결정한 것도 새로운 계획인데, 2023년도 예산에는 이지스함의 수직발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취득하기 위해 2,113억엔을 계상하고 있다.

2) 통합미사일 방위능력

극초음속 활공무기(HGV) 등의 탐지·추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식 경계관제레이더(FPS)의 능력 향상 및 차기 경계관제레이더의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패트리엇 시스템을 개량하기 위해 신형 레이더인 저공 및 미사일 방위 센서(LTAMDS: Lower Tier Air and Missile Defense Sensor)를 도입하여, 능력향상형 요격미사일(PAC-3MSE)을 통한 극초음속 활공무기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03식 중거리지대공 미사일의 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탄도미사일 방어용 요격미사일(SM-3 블록ⅡA), 능력향상형 요격미사일(PAC-3MSE), 장거리 함대공미사일(SM-6) 등을 도입한다.

또한 호위함 간의 연계된 사격을 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취득하여 공동교전능력(CEC)을 확보하며, 패트리엇 시스템의 정보조정장치(ICC: Information Coordination Central)를 개량하여 각종 미사일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반격능력과 관련해서는 이를 위한 별도의 장비도입 계획은 없고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을 활용하여 반격능력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방위력정비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마이니치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3단계의 지상배치형 반격능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1단계는 12식 지대함미사일의 지상발사형(사정거리 1,000km)이 완성되면 남서지역에 배치하여 이를 활용하고(2025~26년), 2단계는 도서방위용 고속활공탄 등 사정거리 2,000km 이상의 미사일 완성되면 후지산 부근에 배치하여 이를 활용하며, 3단계는 2030년대 중반에 운용을 목표로 하는 극초음속미사일(사정거리 3,000km)이 완성되면 홋카이도에 배치하여 이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언론매체에서는 지상발사형 토마호크미사일을 도입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토마호크미사일을 반격능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2023년부터 도입하는 토마호크미사일은 함정발사형이어서 토마호크미

사일을 지상배치형 반격능력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3) 무인자산 방위능력

무인자산은 해상감시에 도움이 되는 체공형 무인기(UAV) 및 함재형 무인장비, 상대 위협권 내에서 목표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찰용 무인기와 다양한 정보수집·경계감시·정찰·타겟팅(ISRT)용 무인자산을 취득한다. 또한 분산 전개한 부대, 이격된 기지, 함정 등에 신속한 보급품 수송을 위해 수송용 무인기 도입을 검토하며, 각종 공격기능을 보유한 다용도·공격용 무인기 및 소형 공격용 무인기도 취득한다.

해상과 수중에서는 함정과 연계해 작전이 가능한 무인수상항주체(USV) 및 각종 무인수중항주체(UUV)를 개발, 취득한다. 육상에서는 무인차량(UGV)과 무인기(UAV)를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기지 등 중요시설의 경비 및 방호에 활용한다. 무인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유인기와 무인기(UAV)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여 복수의 무인장비를 동시에 운용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4) 영역횡단 작전능력

(1) 우주 영역에서의 능력

스탠드오프 미사일 운용 등을 위한 목표의 탐지·추적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위성컨스텔레이션을 구축한다. 또한 극초음속 활공무기의 탐지·추적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증대하는 위성통신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대역의 복층화를 추진하다.

우주영역에서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지휘통제·정보통신 등을 방해하는 능력을 갖추며, 우주영역파악(SDA: Space Domain Awareness)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에 우주영역파악 위성을 발사하고, 이러한 위

성을 복수로 운영하도록 추진한다.

(2) 사이버 영역에서의 능력

최신의 사이버 위협을 고려하여 더 이상 안전한 네트워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사이버 영역의 능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방위성 자위대의 사이버 보안태세 강화를 위해 육상자위대 통신학교를 육상자위대 시스템통신 사이버학교로 개편하여 사이버요원을 육성하는 교육기반을 구축한다.

(3) 전자파 영역에서의 능력

통신 방해 및 레이더 방해 능력의 강화, 전자파의 탐지·식별 능력 강화 등 전자파를 이용한 전자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레이저 등을 활용한 소형무인기에 대한 대처에도 전자파를 이용한다.

이를 위해 통신·레이더 방해 기능을 갖는 네트워크 전자전 시스템(NEWS)을 정비하고, 스탠드오프 전자전기 및 위협권 내에서 각종 전자 방해를 실시하는 스탠드인 재머 등을 개발하고, 육상에서 레이더 방해를 하는 대공전자전 장비를 도입한다.

고정익 초계기에 대해서도 전자방해능력을 갖추고, 소형무인기에 대처하는 차량탑재형 레이저 장치의 운용을 시작하며, 고출력 레이저, 고출력 마이크로파(HPM) 등 지향성 에너지 기술의 조기 장비화를 추진한다.

5) 지휘통제·정보 관련 기능

(1) 지휘 통제 기능 강화

영역횡단작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공유기능의 강화를 위해 공통기반으로서의 클라우드 정비, 자위대 지휘통제기능과 관계부처 등과의 연결기능을 강화하는 중앙지휘시스템을 교체한다. 또한 육상자위대의 자율적 작전수행능력을 강

화하는 미래지휘통제시스템 정비, 해상자위대 의사결정을 한층 고속화하는 지휘통제시스템 교체, 항공자위대 지휘통제기능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자동경계관제시스템(JADGE) 교체, 지휘통제기능의 기동성 및 유연성을 강화하고, 우주관련 장비품을 일원적으로 지휘통제하는 우주작전지휘통제시스템 정비를 실시한다.

(2) 정보수집·분석 기능 강화

정보 기능의 핵심을 담당하는 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전파정보, 화상정보, 인적정보 등 기능별 능력을 강화하고, 지리공간정보 활용 체제를 강화한다. 정보수집위성·민간위성 등을 활용한 우주영역에서의 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하며, 목표의 탐지·추적능력 획득을 목적으로 한 위성컨스텔레이션을 구축한다. 효과적인 정보수집·경계감시·정찰·타겟팅(ISRT)을 위한 무인기 등을 취득한다.

(3) 인지영역을 포함한 정보전 등에 대한 대처

정보전 대처의 핵심을 담당하는 정보본부에서 정보수집·분석·발신에 관한 체제를 강화하고, 각국 동향에 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개정보의 자동수집·분석 기능을 정비하며, 각국에 의한 정보발신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한 SNS상의 정보 등을 자동 수집하는 기능을 정비한다.

6) 기동전개능력·국민 보호

도서지역 침공 저지에 필요한 부대 등을 남서지역으로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해 수송선박(중형급선박(LSV), 소형급선박(LCU) 및 기동함정), 수송기(C-2), 공중급유·수송기(KC-46A 등), 수송·다용도헬기(CH-47J/JA, UH-2) 등 각종 수송자산 취득한다. 해상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차량 및 컨테이너 대량수송에

특화된 민간선박을 확보한다. 남서지역으로의 수송을 위해 수송 차량(컨테이너 트레일러) 및 하역 기재(대형 크레인, 대형 지게차 등)를 취득한다. 수송을 필요로 하는 보급품의 비축을 통해 수송 소요를 경감하는 대책을 강구한다.

7) 지속성·강인성

(1) 탄약 등의 정비

12식 지대함 유도탄 등 스탠드오프 미사일, 탄도미사일방어용 요격미사일(SM-3 블록ⅡA), 능력향상형 요격미사일(PAC-3MSE), 장거리 함대공미사일(SM-6),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능력향상형 등 각종 탄약에 대해 필요한 수량을 조기에 정비한다.

또한 안정적으로 탄약을 양산하기 위해 탄약의 유지 정비 체제 강화를 도모한다. 증가하는 탄약의 보관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탄약고 증설 및 불용 탄약 폐기를 촉진한다.

(2) 연료 등의 확보

자위대가 실시하는 작전에 필요한 연료소요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연료탱크의 신규 정비 및 민간연료탱크를 차입한다

(3) 방위 장비품의 가동율 향상

부품 부족에 의한 불가동을 해소하고 2027년도까지 장비품의 가동율을 최대화한다. 이를 위해 수급 예측의 정밀화, 부품 수급 시간의 단축을 위해 보급창고를 개량한다. 가동율 향상을 위해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지정비 등의 외부위탁을 추진하고, 후방지원 분야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도입해 최적화를 추진한다.

(4) 시설 정비

각종 탄약 취득에 연동하여 필요한 탄약고를 정비한다. 탄약고 확보에 있어서 각 자위대의 효율적인 협동운용, 미군 탄약고 공동사용, 탄약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 도서지역으로의 분산배치를 추구한다.

방호 및 전쟁지속능력 확보를 위해 주요 사령부의 지하화·구조강화·전자펄스(EMP) 공격대책, 라이프라인 다중화 등을 실시하고, 인력절감을 도모하면서 기지 경비기능을 강화한다. 이러한 시설정비는 5년간 집중하여 진행해 나간다.

3. 소요경비와 방위비 수준

2023~27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방위력정비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5년간 43조엔으로 결정되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간 인건비는 11조엔, 물건비(장비구입 및 유지비)는 27조엔이며, 2023년 이전에 도입한 장비의 이월된 장비구입비가 5조엔 정도 남아 있어서 5년간의 방위비 합계가 43조엔이 되는 것이다. 5년 동안 매년 8조 3,000억엔 정도의 방위비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기간 중에 도입이 결정된 장비 중에 기간 중에 장비대금을 완불하지 않고 2028년 이후에 지불하도록 이월된 장비구입비가 16조 5,000억엔 정도 남아 있을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본적인 방위력 증강을 위한 7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는 합계 43조 5,000억엔인데, 전쟁지속능력 강화를 위해 15조엔, 육해공 자위대의 전투차량, 함선, 전투기 등을 도입하기 위해 6조엔,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5조엔 등이 계상되어 있다. 이 중에서 2023년에는 약 9조엔 장비도입을 계약하고, 약 4조 4,000억엔을 지불할 예정이다.

2023년 방위비는 6조 6,001억엔(주일미군 관련 경비 등을 포함시 6조 8,219억엔) 수준으로 요청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2조 1,969억엔, 물건비가 4조 4032억엔이며, 물건비 중 이월된 장비구입비(세출화경비)가 1조 8,850억엔

이다. 6조 6천억엔은 방위력정비계획에서 결정된 5년간 방위비 43조억엔과 비교할 때, 적은 액수이지만, 2024년 이후에 지출되는 장비구입비(후년도부담분) 7조 676억엔이 있기 때문에, 방위비 지출 시기가 연기되었을 뿐 조기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려는 의지는 반영되어 있다. 2022년 방위비가 당초예산 기준으로 5조 1,7780억엔(주일미군 관련 경비 등을 포함시 5조 4,005억엔)이었기 때문에, 2023년의 요구액은 1조 4천억엔 이상 증액된 것이다.

일본은 GDP 1% 수준의 방위비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미국이 GDP 2% 수준까지 방위비를 증액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NATO 기준의 방위비 계산법을 적용하여 현재 GDP 1.1~1.2%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새로운 안보문서에 따라 방위비를 증액하더라도 NATO 기준 혹은 보다 폭넓은 방위비 계산방식으로 GDP 2% 수준에 맞출 가능성이 있다.

〈표 2〉 방위력정비계획에 제시된 2023~27년 간 방위비 총액

인건비 등	11조엔		
물건비 등 (장비구입 및 유지비)	27조엔		
세출화 경비 (이월된 장비구입비)	5조엔	후년도 부담분 (이월될 장비구입비)	16.5조엔
합계	43조엔 (매년 8.3조엔 수준)		

〈표 3〉 방위력정비계획에 제시된 필요한 사업에 관련된 사업비(물건비) 내역

구 분	분 야	사 업 비	
		5년간 사업비	2023년 사업비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약 5조엔	약 1.4조엔
통합방공미사일 방위능력		약 3조엔	약 1.0조엔
무인장비 방위능력		약 1조엔	약 0.2조엔
영역횡단작전능력	우주	약 1조엔	약 0.2조엔
	사이버	약 1조엔	약 0.2조엔
	차량, 함선, 항공기 등	약 6조엔	약 1.2조엔

구 분	분 야	사 업 비	
		5년간 사업비	2023년 사업비
기동전개능력·국민 보호		약 2조엔	약 0.2조엔
지휘통제정보 관련 기능		약 1조엔	약 0.3조엔
지속성·강인성	탄약·유도탄	약 2조엔	약 0.2조엔
	장비품 등의 유지정비비·가동성확보	약 9조엔	약 1.8조엔
	시설의 강인화	약 4조엔	약 0.5조엔
방위생산기반의 강화		약 0.4조엔	약 0.1조엔
연구개발		약 1조엔	약 0.2조엔
기지대책		약 2.6조엔	약 0.5조엔
교육훈련비, 연료비 등		약 4조엔	약 0.9조엔
합 계		약 43.5조엔	약 9조엔

〈표 4〉 2023년 방위비 요구액

인건비 등	2조 1,969억엔		
물건비 등 (장비구입 및 유지비)	2조 5,182억엔		
세출화 경비 (이월된 장비구입비)	1조 8,850억엔	신규후년도부담액 (이월될 장비구입비)	7조 676억엔
합계	6조 6,601억엔		

Ⅱ. 방위력정비계획의 평가

일본이 새로운 안보 관련 3문서를 발표한 것은, 중국,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살리면서 군사기술 발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방위력 정비계획은 방위력 강화를 위한 7개 사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질과 양에서 충분한 방위력을 조기에 구축할 것을 강조

하고 있다. 특히 방위력의 조기구축을 위해 장비의 조기 조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방위성 내 업무상 절차, 계약 방식 등을 개선하고, 운용실증·평가·개선 등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5년 이내에 장비화하고, 대략 10년 이내에 본격 운용하는 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충분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인력 절감형 운영 및 인력 절감형 장비 및 무인장비 도입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인력 절감형 운영은 육상자위대의 사단·여단 비행대를 폐지하고 각 방면대에 헬리콥터 기능을 집약시키는 방향으로 항공체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무인장비 도입과 관련해서는 장비운용의 최적화를 추진하는데, 이는 기존의 유인장비의 역할을 줄이고 무인장비의 역할을 확대시켜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전차·전투헬기(AH) 및 관측헬기(OH)의 역할은 다용도·공격용 무인기 및 정찰용무인기 등으로 이관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해상자위대는 광역에서의 해상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공형 무인기를 취득함에 따라 고정익 초계기(P-1)의 취득 수량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공격형 무인기의 도입으로 호위함 탑재 전투기(F-35B)의 소요와 초계헬기(SH-60K)의 소요를 다시 조정하고 있다. 나아가 다용기(U-36A)는 점차 도태시킬 예정이다. 항공자위대는 무인기의 도입으로 구난·수색기(U-125A)도 폐기해 나갈 방침이다.

Ⅲ. 맺음말

일본이 발표한 안보관련 3문서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주로 반격능력의 확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안보관련 3문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이 고민하고 있는 안전보장상의 위협인식은 무엇이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방책을 강구하고 있는가이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이

양적으로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고, 이러한 대량의 무기를 동원한 공격이 일본으로 향할 경우, 일본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질적으로 우세한 항공기와 함정, 잠수함으로 대응해 왔으나, 이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질과 양 양면에서의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함정 및 항공기의 보유목표를 상향 설정하면서, 동시에 무인장비를 대폭 활용하여 육상, 공중, 해상, 수중에서 무인기를 운용할 계획이며, 기존의 유인장비를 점차 축소해 나갈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인력절감형 방위력 건설은 이미 2018년 12월에 발표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유인자산을 삭감시키면서 무인장비활용을 확대해 나가는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에 대한 공격이 발발할 경우 다량의 무기를 보유한 적의 공격을 격퇴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쟁지속능력을 강조하면서, 탄약 및 미사일 수량의 확보, 장비 가동율의 제고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복수의 무인장비를 관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인력절감형 자위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군사기술의 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극초음속미사일의 경우, 극초음속미사일의 개발뿐만 아니라 동시에 적의 극초음속미사일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지대공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드론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고출력 레이저, 고출력 마이크로파 및 레일건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국도 일본이 시도하고 있는 유인장비와 무인장비의 최적 배합, 극초음속미사일, 드론 등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 개발 추이 등에 관심을 갖고 한국군의 능력 강화 및 최적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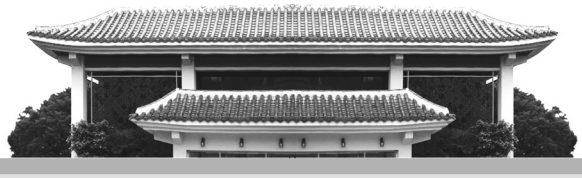
참고문헌

国家安全保障会議. 2022,『防衛力整備計画』,
https://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plan/pdf/plan.pdf.
防衛省. 2022,『防衛力整備計画について』,
https://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plan/pdf/plan_outline.pdf.
防衛省. 2022,『我が国の防衛と予算 – 防衛力抜本的強化「元年」予算 – 令和５年度予算の概要』
https://www.mod.go.jp/j/yosan/yosan_gaiyo/2023/yosan_20221223.pdf.

일본 전문가가 보는
일본 안보정책 변화와 한반도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이사 겸 부총장, 교수



2022년 12월 16일 일본 각의에서 결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의 핵심은 일본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본격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구축하겠다는 것을 제시한 것에 있다. 이미 일본 정부는 미일정상회담 성명 등을 통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그것이 "국제사회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인식의 표명은 미국에 대한 일본의 공약이라는 측면도 있으며, 향후 자위대는 미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Ⅰ. 중국의 대두

현재 대만해협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사적 밸런스의 커다란 변화는 주요 각국의 군사비 추이를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1-2021년의 10년간 미국의 군사비는 6.1% 감소한 데 반해 중국의 군사비는 72%나 증가했다.[1] 물론 2021년 기준 연간국방비 액수는 미국이 8,010억 달러로 압도적으로 세계 1위이며, 2위인 중국은 2,930억 달러로 미국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의 전력(戰力)이 동아시아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데 반해 미국의 전력은 글로벌하게 전개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만해협에 배치된 미국의 전력이 중국의 전력을 압도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

1 각국의 국방비는 다음 자료를 참조할 것. "The 40 countries with the highest military expenditure in 2021," in Diego Lopes da Silva, Nan Tian, Lucie Béraud-Sudreau, Alexandra Marksteiner, and Xiao Liang,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1," SIPRI Fact Sheet, April 2022, p. 2,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2022-04/fs_2204_milex_2021_0.pdf.

다. 참고로 일본의 군사비는 세계 9위 수준의 541억 달러로 미중 양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지만, 전략적 중요성은 어느정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어쨌든 장기적인 추이를 고려했을때 미일 양국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을 계속한다고 해도 중국에 대해 우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중국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다. 미 국방부의 『중화인민공화국의 군사 및 안보의 진전에 관한 연차보고』 2022년 판에 의하면, 중국은 사정거리 1,00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600발 이상, 사정거리 1,000-3,000km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500발 이상, 사정거리 3,000-5,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250발 이상, 사정거리 5,0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300발 이상, 또한 사정거리 1,500km 이상의 지상 발사형 순항미사일을 3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다.[2]

이러한 능력을 배경으로 중국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대만과 일본 근해로 9발의 탄도미사일을 착탄시키는 위협을 감행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중국-대만의 평화적 통일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 제시되는 한편 "무력사용을 결코 포기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을 것이다", "조국의 완전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등의 의지가 표명되었다. 이처럼 미국 혼자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강대해진 중국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일본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일이다.

---

2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2," Annual Report to Congress, October 26, 2022, p. 167.

Ⅱ. 실전 능력 중시의 방위력정비계획

중국의 군사력이 강화되고 대만 통일에 대한 의사도 명확하게 표명되는 가운데 일본은 7개 분야를 중시하는 방위력정비계획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① 스탠드오프 방위능력, ② 통합방공(防空) 미사일방위능력, ③ 무인자산(asset) 방위능력, ④ 영역횡단작전, ⑤ 지휘통제·정보 관련 기능, ⑥ 기동전개능력·국민 보호, ⑦ 지속성·강인성(强靭性)이다. 이들 7개 분야의 특징은 모두 실전 능력의 강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즉, 이전의 방위력정비계획이 전투차량, 함정, 항공기 등의 정면 장비(직접 전투에 사용하는 무기, 역자 주)에 중점을 두었었던 데 대해 이번 계획은 실전에서 그런 정면 장비의 능력을 어떻게 최대한 끌어낼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하 항목별로 중요한 점에 대해서 언급해두고자 한다.

우선 ① 스탠드오프 방위능력인데, 당분간 공중·지상·해상 발사형의 장거리 대지·대함 미사일 등을 도입하여 센카쿠열도 등의 도서방위를 위한 대비를 강화함과 더불어 필요할 경우 적 영토 내 타겟에 대해 공격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통합방공 미사일방위능력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해상발사 상층 요격시스템인 SM-3와 지상발사 하층 요격시스템인 패트리어트 PAC-3 등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극초음속 무기 등 미래의 공중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헌법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적의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공격작전을 '통합방공 미사일방위'의 일환으로 실시한다고 자리 매김함으로써 소위 '반격능력'의 보유도 본 항목 속에 기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선제 공격을 위법한 것으로 보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적 영역 내에 대한 공격은 어디까지나 적의 공격이 발생한 뒤에 실시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반격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참고로 한국 정부는 자위권의 범위 내에서의 선제공격은 합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킬체인 능력을 강화하

고 있다).

③ 무인자산 방위능력에 대해서는 항공·해상·수중·육상의 무인자산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무인자산의 이용에 의한 작전상의 효과를 최대화함과 더불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적 자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다.

④ 영역횡단작전은 일본의 안보 관계자들 사이에는 '우사덴(우주, 사이버, 전자파의 일본어 발음을 따서 부르는 말, 역자 주)'이라는 약어가 유통되고 있을 정도로 현재 가장 주목받는 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에서의 능력 강화에 대한 항목이다. 우주 영역에 대해서는 항공자위대가 담당하지만,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머지않아 항공자위대는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 될 예정이다. 또한, 우주 영역파악(SDA) 능력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우주설치형 광학 망원경(SDA 위성)의 운용을 시작한다. 사이버영역에서는 육상자위대가 인재육성 등 기반확충의 중핵을 담당한다. 또한, 전자파 영역에 대해서는 육해공 자위대가 전자전 장비를 취득·증강해 전자파 영역에서의 능력 강화를 꾀한다.

⑤ 지휘통제·정보 관련 기능에 대해서는 정보수집 능력의 강화, 의사결정의 신속화, 지휘명령 전달을 위한 네트워크의 정비가 과제가 된다. 또한, 장거리 공격능력의 도입에 수반하여 종래의 정보수집·경계감시·정찰·(ISR)에 타겟팅을 추가한 정보수집·경계감시·정찰·타겟팅(ISRT)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본부의 정보기능을 강화하고 지휘통제 기능과의 긴밀한 연계를 꾀한다.

⑥ 기동전개능력·국민 보호에 대해서는 대만 유사 등의 경우에 신속하게 일본열도 남서 방면으로 부대를 전개하기 위해 육상자위대의 중형·소형 선박, 해상자위대의 수송함, 항공자위대의 수송기 등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본 항목에는 국민보호(한국의 민방위에 해당)도 들어가 있으며, 이것은 부대를 남서 방면으로 전개하기 위해 사용한 수송기 등이 돌아올 때 주민 대피를 위해 사용할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⑦ 지속성·강인성에 대해서는 탄약, 연료 확보 및 이를 위해 필요한 화약고의 정비 등이 열쇠가 된다. 또한, 미군 화약고의 공동 사용이나 화약고

의 분산 배치를 추진함과 함께 주요 사령부의 지하화·구조 강화·전자기 펄스(EMP) 공격 대책, 전투기용 분산 패드의 확보, 비상격납고의 엄체호 정비 등을 실시한다. 나아가 국내에서의 탄약 제조태세를 확충한다. 이렇게 일본이 추진하려고 하는 방위력의 강화는 매우 실전 지향이 강한 것이다. 다만, 이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허들을 넘을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방위비 확보를 위한 증세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당 자민당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있으며 앞으로 중요한 정치과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탄약이나 연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탄약고 설치 시 소위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민간 공항이나 항만을 방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게 되지만, 이에 대해서도 시설 정비나 성청(省庁) 간 및 지방자치체나 민간조직과의 조정, 지역의 이해 획득 등이 필요하다. 즉, 방위정책의 커다란 방향성이란 점에서 합의는 할 수 있어도 구체적인 시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반대가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이러한 허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가 향후 과제다.

Ⅲ. 한국의 안전보장과 미일동맹

최근 몇 년간 한일의 정치 관계가 악화함에 따라 양국 간의 안보 협력도 정체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 안보에 대한 일본의 코미트먼트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며, 한미동맹에 더해 미일동맹도 한반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미일동맹이 일본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국 방위도 그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미일동맹의 틀 속에서 일본은 한국 방위를 위해 ① 주일미군 기지의 제공, ② 한국을 위해 싸우는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작전 지원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은 한국을 위해 싸우는 미군에 대해 미사와(三沢), 요코타(横田), 아쓰기(厚木), 요코스카(横須賀), 이와쿠니(岩国), 사세보(佐世保), 가데나(嘉手納), 후텐마(普天間) 등에 있는 기지를 제공하게 된다.

둘째,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는 한국 방위를 위해 행동하는 미군에 대해 작전지원을 하게 되어 있다. 1997년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1999년에 성립한 주변사태법 등에 의해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해 후방지역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수집, 경계감시, 기뢰 제거 등의 협력을 하게 되어 있다. 나아가 2015년 일본의 평화안보법제 성립에 의해 제한적이나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전에 비전투임무로 한정되어 있었던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작전지원의 범위가 전투임무까지 확대되었다. 이로써 자위대는 괌이나 하와이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한반도 근해에서 행동하는 미군 함정을 방호(防護)하며 북한 근해에서 기뢰를 제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통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일본의 코미트먼트는 크게 강화되었다. 한일관계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커다란 흐름 속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일본이나 미일동맹이 한국 방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일본이 안보정책의 개정은 한국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진전됨으로써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는 것의 위험(risk)이 커지고 있는 점이다. 북한은 1990년대 말 부터 일본을 겨냥하는 노동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해 이미 50기 정도의 이동식 발사대와 2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핵무기도 2017년에 실시한 6차 핵실험에서는 추정 출력이 약 160킬로톤에 달했으며, 북한은 소형화·경량화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대륙간탄도로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 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점에 비춰 북한은 이미 일본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분쟁 발

생 시에 북한은 일본에 대해 “미군 기지를 사용하게 한다면 일본을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협박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재래식 탄두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거의 확실해졌다.

이렇기 때문에 위기 시 주일미군 기지를 사용하고 싶은 미국과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일본의 이해가 대립해 미일관계가 긴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 미사일의 배치로 일본이 더이상 군사적 성역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일의 정책담당자나 전문가는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위기 시 어떻게 해서 미군의 기지 사용과 일본의 안전 확보를 양립해 나갈 것인가, 또한, 한미일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유지해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해갈 필요가 있다.

Ⅳ.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반격능력’

이번 안보정책의 개정으로 일본이 적 영역 내에 대한 공격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일본의 공격능력 보유가 한국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한반도와 관련한 범위 내에서 일본의 공격능력 보유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북한은 화성-12, 14, 15, 17 등 괌과 하와이 나아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이 그런 능력을 보유했을 경우 미국은 자국 방위를 우선해 대일본용 미사일인 노동이나 스커드-ER에 대한 대응을 뒤로 미루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일본은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공격작전을 펼칠 필요가 생기게 된다.

둘째, 미사일방위를 보완하는 효과이다. 최근 북한은 3-4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는 ‘포화공격’ 훈련을 하거나 로프티드 궤도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함으로써 일본의 미사일방위망을 돌파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

데 일본이 다소나마 공격능력을 보유하면 북한은 회피행동을 하면서 공격작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미사일방위작전을 펼치기 쉽게 된다.

다만, 일본이 공격능력을 보유해도 북한에 대한 공격작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은 한미 양국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은 이미 강력한 타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 화포나 로켓포를 파괴할 수 있는 대화력포대(counter-fire batteries)와 대포병 레이더에 더해 전투폭격기로서 F-4를 18기, F-16을 166기, F-15를 59기, F-35를 36 기, FA-50을 60기, 미사일로는 탄도미사일인 현무2(사정거리 300km+α), 순항미사일인 현무3(사정거리 500-1,500km) 등 모두 1,000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비해 한국은 북한의 군사 기지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한국은 강력한 반격작전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셋째, 일본이 스스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대일 미사일 공격에 대한 작전을 미국과 한국에 맡겨 버렸을 경우 일본은 '무임승차'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공격작전은 조종사 등의 희생을 동반하는 매우 위험스러운 행동이다. 일본만 공격작전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나 미국 조종사가 일본을 위해 희생되었다"는 논의가 분출해 일본은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태도나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한국의 정치환경을 생각하면 이 점에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다. 일본은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능력이 뛰어난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대한 전통적인 공중공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F-35는 적전투기 요격작전에 투입되지 않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고가이며 고성능의 장비를 놀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분쟁이 발생하여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북한에서도 심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귀중한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비인도적인 행위이다. 만일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한 피해를 줄이고 조기에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러한 준비를 해둠으로써 억제력도 높아진다.

한편, 북한에 대한 어떠한 공격작전도 한미 양국과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을 포함하여 한미 양국이 신속하게 북한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공격작전을 하게 된다. 북한에 대한 일본의 공격작전은 만약 발생한다 하더라도 한미 양국에 의한 공격이 개시된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일본이 한미 양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공격작전에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타겟정보의 공유나 역할 분담에 대해 한미 양국과 긴밀하게 조율하게 될 것이다.

V. 한반도에 대한 코미트먼트 저하 리스크

이상과 같이 일반론의 관점에서 볼때 일본의 신정책은 한반도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보다 넓은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전략환경 전체를 고려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일 양국의 코미트먼트가 향후 저하될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다. 미일동맹은 한반도와 대만해협이라는 두 지역의 안보에 동시에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대만 통일에 대한 명확한 의사로 인해 향후 대만해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수반하여 일본도 한반도에서 대만해협으로 대응의 중점을 옮기지 않을 수 없는 가능성이 크다.

한편,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위기를 조성하려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중국은 북한의 군비 증강을 반기지 않았지만, 최근 미중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데다 대만 문제가 부상함으로써 상황이 바뀌고 있다. 중국이 일정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묵인하고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용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북한에 재래식 전력 분야에서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위기가 고조되면 중국은 그때를 대만침공 기회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한미동맹이 북한에 대응하고, 미일동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 않도록 남서 방면으로 전력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일본이 한국 방위에 협력할 여지가 좁아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향후 한미일의 안보를 긴밀하게 하여 위기 시나 유사시의 역할 분담 방안이나 제한된 방위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Xiao Liang, Dr Diego Lopes da Silva, Dr Nan Tian, Dr Lucie Béraud-Sudreau and Alexandra Marksteiner. 2022,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1." *SIPRI*, Stockholm: April, 2022. p. 2.

U.S. Department of Defense. 2022, "2022 Report on Military and Security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nual Report to Congress*, October 26, 2022, p. 167.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도서목록

■ 북한연구 시리즈

1. 북한평론 박재규 저 1975
2. 북한외교론 고병철 외 공저 1977
3. 북한무역론 공산권경제연구실 편 1979
4. The Politics of North Korea Jae Kyu Park et., eds. 1979
5. 북한군사정책론 박웅서 외 공저 1983
6. 북한정치론 박재규 저 1984
7. 북한의 대외정책 박재규 편 1986
8. *The Foreign Relations of North Korea: New Perspectives* Jae Kyu Park et al., eds. 1987
9.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고현욱 외 공저 1987
10. 북한의 법과 법이론 최종고 외 공저 1988
11.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정상훈 외 공저 1990
12. 북한의 정치이념: 주체사상 양재인 외 공저 1990
13. 북한체제의 수립과정 1945~1948 김일평 외 공저 1991
14. 한국전쟁과 북한 사회주의체제건설 고병철 외 공저 1992
15.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최청호 외 공저 1993
16. 북한 사회주의경제의 침체와 대응 황의각 외 공저 1995
17. *North Korea in Transition and Policy Choices: Domestic Structure and External Relations* Jae Kyu Park ed. 1999
18. 인터넷과 북한 연구소 외 공편 2000
19. 김정일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 함택영 외 공저 2000
20.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남북 관계의 변화와 전망 서대숙 외 공저 2002
21.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혜산 최완규 편 2004
22. *North Korea and the World: Explaining Pyongyang's Foreign Policy* Byung Chul Koh ed. 2005
23.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최완규 편 2006
24. 북한의 노동 양문수 외 공저 2007
25.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 200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최완규 편 2007

26.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윤대규 편 2008
27.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윤대규 편 2008
28.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 윤대규 편 2008
29.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윤대규 편 2008
30. *The Dynamics of Change in North Korea: An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Phillip H. Park ed. 2009
31.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에 관한 법제도 윤대규 편 2010
32.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윤대규 편 2009
33.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 이수훈 편 2010
34. 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 이수훈 편 2010
35.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 이수훈 편 2011
36. 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 질서 이수훈 편 2011
37. 동북아 법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과제와 전망 이수훈 편 2012
38.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를 통해 본 동북아 미래구도 이수훈 편 2012
39. *Nuclear North Korea: Regional Dynamics, Failed Policies, and Ideas for Ending a Global Stalemate* Su Hoon Lee ed. 2012
40. 개성공업지구 법제의 진화와 미래 개성공업지구 법제연구회 편 2012
41. 사회주의 정치·경제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이수훈 편 2014
42. 사회주의 법 체제전환과 글로벌 거버넌스 윤대규 편 2015
43. 북한 청년들은 "새 세대"인가? 연구소 편 2015
44.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 경제 윤대규 편 2016
45.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제도 윤대규 편 2016
46.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경제 체제전환 전망 윤대규 편 2016
47.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 체제전환 전망 윤대규 편 2016
48. *Rebuilding North Korea's Economy: Politics and Policy* Phillip H. Park 2016
49.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사금융과 돈주 임을출 저 2016
50. 북핵, 오늘과 내일 연구소 편 2016
51. *North Korean Tourism: Plans, Propaganda, People, Peace* Dean J. Ouellette 2017
52. 북한학의 새로운 시각: 열 가지 질문과 대답 신석호 외 공저 2018
53. 김정은 체제와 한반도 변화 이관세 저 2019
54. 김정은시대 북한을 보는 10가지 시각: 지속과 변화 북대북한연구회 편 2019

55. 북한 허위정보에 대한 다층적 분석과 이해 이관세 저 2020
56.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 연구소 편 2020
57. 김정은 체제 경제관리와 법 박서화 저 2021
58.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101가지 질문·답변- 연구소 편 2021
59. 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과 공민의 권리 및 의무 박서화 저 2021
60. 김정은 시대의 자력갱생 - 계승과 변화 임을출 저 2021
61. 북한행정 연구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최영준 저 2022
62. 북한 사회주의심리학의 이해 이형종 저 2022

■ 국제관계연구 시리즈

1. 동아세아의 평화와 안보 박재규 편 1974
2. 「테크네트로닉」 시대의 국제정치 Z. Brzezinski 저 / 박재규 역 1974
3. *East Asia and the Major Powers: From Confrontation to Accommodation* Jae Kyu Park et al., eds. 1975
4. 핵확산과 개발도상국 박재규 편 1979
5. *Nuclear Prolifer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Jae Kyu Park ed. 1979
6. 80년대의 미소관계 L. Caldwell et al. / 소련연구실 역 1981
7. 판례중심 국제법 김정건 편 1982
8. *U.S-Korean Relations, 1882-1982* Tae-Hwan Kwak et al., eds. 1982
9. *The Soviet Union and East Asia in the 1980s* Jae Kyu Park et al., eds. 1983
10. *Korea and Indonesia in the Year 2000* Jae Kyu Park et al., eds. 1984
11. SDI와 아시아의 안보 박재규 외 공저 1987
12.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Its Implications for Asia and the Pacific* Jae Kyu Park et al., eds. 1987
13. 한국과 미국 1: 정치·안보관계 안병준 편 1988
14. 한국과 미국 2: 경제관계 김덕중 편 1988
15. 한국과 미국 3: 사회·문화관계 임희섭 편 1988
16. 한·미관계의 재조명 김덕중 외 공편 1988
17. *Alliance Under Tension: The Evolution of South Korean-U.S. Relations* Manwoo Lee et al. 1988
18. *The United States and the Defense of the Pacific* Ronald D. MacLaurin et al. 1989
19. 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 쿠친스키 외 공편 1990

20. *Current Issues in Korean-U.S. Relation: Korean-American Dialogue* Manwoo Lee ed. 1993
21. *The Changing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Manwoo Lee et al., eds. 1993
22. *Culture & Development in a New Era and in a Transforming World* Manwoo Lee et al., eds. 1994
23. 위기의 세계와 한국 연구소 편 1994
24. *The U.S.-ROK Alliance in Transition* Tae-Hwan Kwak et al., eds. 1996
25. *The Search for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Toward the 21st Century* Tae-Hwan Kwak ed. 1997
26. *The Future of China and Northeast Asia* Tae-Hwan Kwak et al., eds. 1997
27. 한국과 러시아 관계: 평가와 전망 서대숙 편 2001
28. 조정기의 한미동맹: 2003~2008 이수훈 편 2009
29. 핵의 국제정치 이수훈 편 2012
30. Northeast Asia's Nuclear Challenges Su Hoon Lee ed. 2013
31. 동북아 新권력체제와 한반도 정책 이수훈 편 2013
32. *South Korea-India: Strategic Cooperation* Lakhvinder Singh ed. 2014
33. 동아시아 질서 변화와 한반도 미래 연구소 편 2015
34. 대북제재의 정치경제학 연구소 편 2016
35. 한일 관계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관세 외 저 2020
36. 미중 전략적 경쟁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이관세 외 저 2020
37. 북중관계: 1945-2020 이상만 외 저 2021
38. 새로운 한일 관계를 향하여 길윤형, 김용민, 조진구 저 2022

■ 통일연구 시리즈

1. *The Two Koreas in World Politics* Tae-Hwan Kwak et al., eds. 1983
2. *Korean Reunification: New Perspectives and Approaches* Tae-Hwan Kwak et al., eds. 1984
3. 한반도의 통일전망: 가능성과 한계 김한교 외 공저 1986
4. 남북한 정치통합과 국제관계 구영록 외 공저 1986
5. 남북통일이론의 새로운 전개 양성철 편 1989
6.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박성조 외 공저 1991
7.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함택영 외 공저 1992

8.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 연구소 편 1996
9. 분단 반세기 남북한의 사회와 문화 연구소 편 1996
10. *The Four Powers and Korean Unification Strategies* Tae-Hwan Kwak ed. 1997
11.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곽태환 외 공저 1997
12.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곽태환 외 공저 1997
13. *The Korean Peninsula in Transition: The Summit and Its Aftermath* Byung Chul Koh ed. 2002
14.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연구소 편 2004
15. *Peace and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Yong-Sup Han 2005
16. *North Korea: Development, Human Rights, and Democracy* North Korea Modernization Research Group ed. 2010
17. 한반도통일론의 재구상 이수훈 외 공편 2012
18. 민주화·탈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이수훈 외 공편 2014
19. 분단 70년의 남북관계 연구소 편 2016
20. 분단 70년의 국제관계 연구소 편 2016
21. 분단 70년의 남북한 사회·문화 연구소 편 2016
22. 한반도 변화와 남북관계 연구소 편 2021

● 한국연구 시리즈

1. 한국의 민주화: 과제와 전망 김호진 외 공저 1989
2. Law and Political Authority in South Korea Dae-Kyu Yoon 1990
3.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 손호철 외 공저 1991
4. 인민당연구 심지연 저 1991
5. 한국정치·사회의 새 흐름 연구소 편 1993
6. *Law and Democracy in South Korea: Democratic Development Since 1987* Dae-Kyu Yoon 2010

● 지역연구 시리즈

1. 연방주의론: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의 무한한 다양성 Valerie Earle ed. / 박재규 역 1974
2. 미국외교행정의 진로: 미국외교정책기구심사위원회보고서 박재규 외 공역 1976

3. 비교공산주의정치론 염홍철 편역 1977
4. 전환기의 동남아세아: 지역정치 및 국제관계 박재규 편 1977
5. *Southeast Asia in Transition: Regional & International Politics* Jae Kyu Park et al., eds. 1977
6. 인도네시아 동남아지역연구실 저 1983
7. 동남아정치론 강태훈 외 공저 1983
8. 중공의 개혁정치: 구조·과정·정책 중·소 연구실 편 1985
9. 현대 일본의 정치 한배호 외 공저 1986
10. 현소련정치의 체계적 이해 안택원 편저 1986
11. 베트남의 정치경제와 국제관계 김국진 외 공저 1987
12. *Koreans in North America: New Perspective* Seong Hyong Lee et al., eds. 1988
13. 일본방위정책의 이상과 현실 정광하 저 1989
14.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Present and Future* Tae-Hwan Kwak et al., eds. 1991
15. 소련 이은순 외 공편 1991
16. 미얀마의 정치와 경제: 버마식 사회주의 한석태 외 공저 1991
17. 동아시아 신질서의 모색 연구소 편 1996
18. 독립국가연합(CIS)의 이해 이영형 저 1999

■ 제3세계연구 시리즈

1. 제3세계의 혁명과 발전 염홍철 외 공저 1987
2. *State-Building in the Contemporary Third World* Su-Hoon Lee 1988
3. 동아시아 발전의 정치경제 이수훈 외 공저 1989
4. 한국과 제3세계의 민주변혁 이수훈 외 공저 1989
5. 현대세계체제의 재편과 제3세계 이수훈 외 공저 1991
6. 변혁기의 제3세계 사회주의 김세균 외 공저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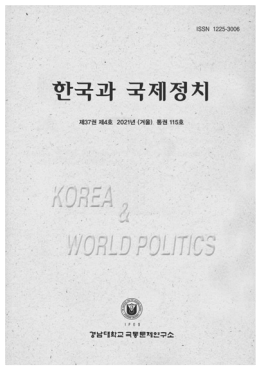
■ 번역 시리즈

1. 절대주의 국가의 계보(개정판) 페리 앤더슨 저 / 함택영 외 공역 1994
2. 농민혁명 제프리 페이지 저 / 강문구 외 공역 1995
3. 동원에서 혁명으로 찰스 틸리 저 / 양길현 외 공역 1995

4. 제국의 신화 잭 스나이더 저 / 함택영 외 공역 1996

● 자료집 시리즈

1. 북한자료집 김정일 저작선 1991
2. 지방미군정 자료집 1993
3. 김일성 연구자료집 2001
4.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2004
5. 북한개발과 국제협력 연구현황 자료집 I 2006
6. 한일관계 기본문헌집 조진구 2020
7. 전후 일본의 방위정책연구 – 주요문서 번역과 과제 – 조진구 2021



한국과 국제정치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정세 및 통일전략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완보문제 전문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매년 4회 발간되는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 학술적 분석과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할 것입니다.

ISSN : 1225-3006 (Print) / ISSN : 2713-7570 (Online)
연락처 : 한국과 국제정치 편집실 T. 02-3700-0708 / alimseo@kyungnam.ac.kr

제38권 제4호 2022년(겨울) 통권 119호

Vol. 38, No. 4, 2022 (Winter)

1. 세력전이 이론의 시각에서 본 투키디데스 함정 탈출의 구조적 조건 :
   21세기 미국-중국 관계를 중심으로
   박 주 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

2. 신국제질서를 추구하는 중국식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도덕적 현실주의(Moral Realism)'를 중심으로
   서 정 경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3. 평시 군사혁신의 역동성: 미래 불확실성 하의 안보상황 인식, 전략적 비전, 기술 발전의 동학
   유 영 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조교수)

4. 2016-17 촛불시위 그 이후: 집회 참여자의 정치행태 추적 분석
   정 재 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5. 누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하고, 그들은 어떤 대북정책 선호를 가지는가?
   유 지 영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수료)·윤 광 일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Asian Perspective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문학술지

Asian Perspective는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주제를 주로 다루는 전문학술지로 1977년에 창간되었다. 1995년에는 해외 선진 학문의 국내 수입과 국내 연구의 해외전파를 위해 미국의 포틀랜드주립대와 공동출판협정을 맺었고, 1998년 학술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 사회 과학 분야 최우수 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다. 2008년에는 사회과학논문이용색인(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의 등재지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지로 인정받았으며, 2019년부터는 새로운 공동출판협정 체결에 따라 미국의 존스홉킨스대출판부와 협력해 출판하고 있다.

Asian Perspective applies an Asian lens to world and comparative politics. With its vital contemporary focus, it probes the regional, international, and transnational issues that affect Asia today. Asian Perspective is peer-reviewed and publishes quarterly. It is produced with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at Kyungnam University. Now in its fourth decade, the journal welcomes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is committed to promoting a lively exchange of ideas between scholars and policymakers.

FORTHCOMING ISSUE

Vol. 47, No. 1 WINTER 2023

Special Issue on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the Indo-Pacific – Part 1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Emerging Technolog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Strategies for Building, Dominating, and Managing Networks — Hyun Ji Rim

Institutional Dilemma: Quad and ASEAN in the Indo-Pacific — Kei Koga

China's Rising Space Power and the CCP's Survival in the Indo-Pacific Era — Fumiko Sasaki

Bilateral Alliances in an Interconnected Cyber World:
Cyber Deterrence and Operational Control i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 James E. Platte

From Conceptual Idea to Strategic Reality:
"Indo-Pacific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Chinese Scholars — Li Li and Tianjiao Jiang

Vietnam

A Two-level Game Approach to Hanoi's Foreign Policy Proactivism — Vu Thi Thu Ngan and Le Dinh Tinh

China

The Yin and Yang of China's Power:
How the Force of Chinese Hard Power Limits the Quest and Effect of Its Soft Power — Shree Jain and Sukalpa Chakrabarti

회원가입안내

◉ 가입방법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본 연구소로 우송 또는 제출하여 주시고, 회비를 납부하심으로써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회원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ifes.kyungnam.ac.kr)

◉ 회비 및 재가입

1. 1년회비
   학생회원 : 30,000원
   일반회원 : 50,000원
   기관회원 : 100,000원
   개인평생회원 : 1,000,000원
   기관평생회원 : 3,000,000원
   * 해외회원은 우송료 15,000원 별도 청구

2. 납부방법
   ① 연구소에 직접 납부
   ② 온라인 : 경남은행 / 570-07-0011980, "경남대학교"

3. 재가입 : 회비 만기일 1개월 전에 회비를 재납부 하시면 됩니다(안내문 발송함).

◉ 회원의 혜택

1.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와 심포지움 등 연구 행사에 초청이 됩니다.
2.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Asian Perspective』,『한국과 국제정치』와『현대북한연구』등의 간행물이 제공됩니다.
   * 해외회원에게는『Asian Perspective』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면 영문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독하셔야 합니다.
3. 본 연구소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대출,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기존 출판도서 구입 시 30%의 할인혜택 (평생회원에게는 무료기증)

◉ 문의처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전화 3700-0725, 팩스 3700-0722, E-mail : pedia@kyungnam.ac.kr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가입 신청서

* 신청일 20 년 월 일

분 류	□ 일반회원 □ 학생회원 □ 기관회원 □ 개인평생회원 □ 기관평생회원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자택주소	□□□□□		전화:( ) -
			휴대폰 :
			E-mail :
직장(학교) 주소 및 직위	□□□□□ 직위 :		전화:( ) -
우편물발송	□ 직장(학교) □ 자택		
학력사항	대학교 과 □석사 □박사과정 학기 (학생회원) 대학교 과 □석사 □박사학위 (연도)		
전공 및 관심 분야			
국내외 학회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주요 경력			
가입권유인			

※ 굵은 선 안의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입니다.

※ 기관회원인 경우 기관명과 주소, 이메일,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용목적

연구소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회원님이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1) 회원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 간행물 배송지 발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지사항 전달 등

2.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1) 연구소는 회원가입, 원활한 회원상담,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최초 회원 가입 당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및 기타 연락처, 이메일주소, 학력사항
   - 선택항목 : 전공 및 관심분야, 국내외 학회활동, 주요저서 및 논문, 주요경력

2) 개인정보 수집방법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서면양식, 팩스,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3) 연구소는 회원님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원님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 및 보존

1) 제공하신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가입일로부터 탈퇴일까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되며, 회원가입을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는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회원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회원탈퇴를 하신 경우라도 이용요금의 정산, 소송이나 분쟁의 대비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보존되며, 이 때 보존되는 개인정보의 열람 및 이용은 해당사유에 국한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_____ **(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한반도 포커스

FOCUS ON KOREAN PENINSULA

2023-01

총론: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대전환과 한반도
- 박영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의 의미와 내용 평가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일본 국가안보 전략과 경제안보
-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교수

'국가방위전략' 평가와 함의: 일본의 방위력과 방위장비이전 3원칙
- 권태환 전 주일국방무관

'방위력정비계획'의 주요내용 평가와 함의 – 자위대 체제, 방위력증강 7대 사업, 소요경비를 중심으로
- 송화섭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일본 전문가가 보는 일본 안보정책 변화와 한반도
-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연구대학원대학 이사 겸 부총장, 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03053)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TEL. 02.3700.0700 FAX. 02.3700.0707
E-MAIL. ifes@kyungnam.ac.kr
https://ifes.kyungnam.ac.kr

비매품/무료

9 788984 215597 93300
ISBN 978-89-8421-559-7

이 문서에는
무료 서체인 KoPub 폰트와 G마켓 산스 폰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외의 서체는 사용되지 않았음을 기재합니다.